

www.kita.net

KITA

통상 리포트

2023
VOL.12

극한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라
- 2024년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

통상지원센터

Contents

극한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라 - 2024년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

요 약

I. 2023년 10대 통상뉴스	0
II. 2024년 통상환경 전망	0
01. Cold War, New Cold War, Hot War? 갈등의 표면화	0
02. 리더십의 변화 : 슈퍼 선거의 해	00
03. 공급망 재편의 확대	00
04. 무역장벽의 다양화	00

통상지원센터 (02-6000-5600, sd.cho@kita.or.kr)



요약

2023년 글로벌 통상환경은 국가와 기업 모두 기후변화만큼이나 어려웠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시작해 미국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를 거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면, 2023년은 EU의 핵심원자재법(CRMA)과 탄소중립산업법(NZIA)이 담긴 그린딜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y Plan)으로 시작해 미중간의 수출통제 공방(미국-반도체, 중국-갈륨, 게르마늄, 흑연)을 거쳐 또 다른 무력충돌인 가자지구 분쟁까지 실재 없이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었다. 미국 IRA 입법에 따른 리스크는 발표된 이행법령을 통해 상당 부분 해소되었고,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도 우리 기업이 '검증된 최종사용자(VEU)'로 지정되며 부담을 덜었다. 그러나 배터리어업계는 해외우려기관(FEOC) 해석지침에 따른 비용부담을, 반도체업계는 미국의 수출통제가 범용 반도체로 확산될 경우와 중국의 대응조치 가능성으로 여전한 부담을 안고 있다.

통상환경 측면에서 2024년은 ▲중전시기를 알 수 없는 두 전쟁(우크라이나, 가자), 그 가운데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질 선거결과에 따른 리더십의 변화, ▲본격적인 균열이 일어나는 공급망 재편, ▲경제안보 강화와 자국중심 산업경쟁력 확보로 보호주의 조치의 확대 등이 예상되며, 그에 따른 불확실성의 극대화도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전 22개월을 맞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리한 소모전으로 비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서방 46개국 이 러시아를 상대로 경제제재를 가하고 있고, 러시아 역시 보복조치로 대응하고 있다. 중전시기 예측이 어려운 가운데 미국과 EU의 국내 여론 분열로 우크라이나 지원이 어려워 종전의 모습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도 가늠하기 어렵다. 최근 우리 자동차기업의 철수사례와 같이 서방 기업의 철수와 기업활동 중단이 빈 자리는 중국 자본이 채워나가고 있고, 전쟁이 끝나더라도 경제제재 해제와 정상화까지는 전쟁기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기업 경영 리스크 조기 해소는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하마스의 기습공격 감행으로 시작된 가자지구 충돌은 전면전으로 확대되며 양측에 큰 사상자가 발생했으나, 주변국과의 대대적인 확전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세계 경제에 큰 부담을 발생시키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 예멘 후티 반군의 테러로 수에즈 운하 통행이 어려워지는 등 가자지구 무력 충돌에 따른 갈등도 조기에 해결되기 어려울 조짐이다.

2024년은 세계 40여 개국에서 리더십 교체를 두고 선거가 시행되는 '슈퍼 선거의 해'이다. 여러 선거 중 통상환경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는 11월에 시행되는 미국의 대선과 연방의회 선거이다. 아직 양당의 대선후보 선정이 완료되지 않은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바이든 現대통령을, 공화당에서는 트럼프 前대통령이 후보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 대통령선거는 유권자들이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이냐, 주별로 할당된 선거인단을 확보해서 합산하는 연방국가의 특성이 반영된 방식으로 치러진다. 따라

서 지난 수십 년간의 선거에서 특정 정당 지지성향이 고착화된 주보다는, 선거 때마다 지지 정당을 바꾸는 소위 ‘스윙 스테이트(swing state)’에서의 결과가 대통령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그에 따라 해당 주의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공약과 발언은 다분히 자국 중심적인 색깔을 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현재 유력한 후보들과 양당 모두 강경한 대중 견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미중 갈등 심화 및 관련 불확실성은 더욱 극심해질 전망이다. EU도 의회 선거와 집행부 교체가 이루어진다. EU에서는 기후대응과 인플레이션 등 경제문제가 핵심 사안이어서 차기 집행부는 양대 이슈를 아우를 수 있는 정치세력 중심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 국가원수(총통) 선거를 실시하는 대만에서는 집권 민진당이 야권통합에 실패한 제1 야당인 국민당이 접전을 펼치고 있다. 대만 총통 선거는 가장 먼저(1월) 실시되는데다, 양안관계와 미중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도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어 관심을 받고 있다. 일본에서도 집권 자민당 총재 임기 만료(9월)에 따른 리더십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임기 만료 전 중의원 해산 및 조기선거 실시로 집권을 이어갈 수 있으나, 최근 총리 측근의 스캔들로 조기선거 시행이 어려울 수도 있다.

2023년 통상환경을 대표하는 키워드 중 하나는 ‘디리스킹’이었다. EU는 ‘중국과의 단절’을 뜻하는 디커플링(decoupling)이 아닌 과도한 의존도 조정이라는 의도를 담아 디리스킹(derisking)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다. 미국도 본래 중국과 디커플링할 의도가 없으며, 다만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첨단산업에 대해서만 규제를 하는 ‘좁은 마당에 높은 울타리’를 세울 뿐이라며 디리스킹에 가세했다. 그러나 현실은 디리스킹 보다 디커플링에 가까워졌다. 미국의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중 갈등이 본격화되기 전인 2017년 대비 7.9%p 감소했다. 그 결과 올해 9월까지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전년 동기 대비 34.9% 감소했고, 올해 전체로도 2010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EU도 과도한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우리에게도 불뚱이 튼 프랑스의 전기차보조금 차등은 중국산 전기를 겨냥한 조치이다. EU 차원에서도 중국산 전기차, 풍력, 태양광 등에 대한 보조금 조사에 착수하거나 검토하고 있다. 3자합의가 끝난 공급망실사지침, 시행되기 시작한 통상위협에 대응하는 ‘강압대응조치(Anti-Coercion Instrument, ACI)’ 등도 중국이 가장 큰 부담이 되는 조치들이다. 한편 자원과 큰 시장을 보유한 신흥국들을 중심으로 미국·EU와 중국·러시아의 진영 갈등 속에 자국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 사우스’의 중요성은 점점 증할 것으로 예상되나, 중국을 대체하기에는 인프라, 노동력, 정부 지원도 등의 기준에서 모자라 대세화로 평가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

2024년 1월 첫 보고가 이루어지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철강, 알루미늄 업계가 당면하고 있는 최대 과제이다. 2025년까지 2년간 내재배출량 보고의무만 부과되나 보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제재가 부과되고, 최종 시행 전까지 이행규칙이 계속 발표될 예정이어서 지속적인 관심과 준비가 요구된다. 미국과 EU간의 ‘글로벌 지속가능 철강알루미늄협정(GSSA)’ 협상도 큰 부담

이다. 선거를 앞둔 양측이 협상을 서두르는 대신 13개월 현 체제를 유지하기로 한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므로 철강·알루미늄 업계의 '탄소통상' 대응 부담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 글로벌 저성장 기조와 보호주의적 색채 확산은 수입규제 조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이미 지난 10월까지 우리나라 제품을 대상으로 전년 대비 3배의 신규조사가 발생했다. 미국 상무부가 진행하고 있는 반덤핑규정 개정과 미 의회에 발의되어 있는 관계법령 개정안도 좀 더 많은 조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부담되는 대목이다. 중국산 제품이 멕시코를 우회해 반입되는 양이 늘어남에 따라 미국이 불만을 드러내자 멕시코가 기습적으로 392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인상한다거나, 제조업 보호와 투자유치를 위해 관세인상, 수입면허 등을 도입하거나 검토하는 인도 등 신흥국의 조치도 우리 수출에는 간과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다.

I. 2023년 10대 통상 뉴스



1. 디리스킹 및 미-중 관계 안정화 노력

- ▶ 디리스킹(de-risking), 서방 국가들의 新 對중국 정책 기조
 - 전면적인 공급망 분리를 의미하는 디커플링과 달리, 디리스킹은 중국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의존 및 반도체·AI 등 안보에 직결되는 최첨단 산업 내 중국의 영향력 축소를 의미
 - EU 집행위원장이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처음 제시했으며, 이후 미국과 G7도 동일한 기조로 중국에 대응하기 시작
- ▶ 미-중 정상회담(11/15)
 - 中 정찰풍선의 美 영공 침입(2/4)으로 고조된 양국 간 긴장 완화
 - 정상회담에서는 군사대화 재개, 펜타닐 근절 협력 합의에 그쳤으며, 대만, 수출통제·투자제한 등에 대한 입장차 재확인



2. 미국, 첨단기술·친환경 분야 계속되는 對중국 압박

- ▶ 대중국 투자제한 행정명령(8/9)
 - 중국 첨단 반도체·양자컴퓨팅·AI 분야에 대한 사모펀드, 벤처 캐피탈 등 미국 자본 투자 규제
- ▶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 강화(10/17)
 - 저사양 반도체·제조장비 통제 및 사전허가 적용 국가 범위 확대
- ▶ IRA 해외우려기관(FEOC) 해석 관련 지침 초안 발표(12/1)
 - FEOC 판단기준을 반도체과학법과 동일한 25%로 설정하고, 기술제휴(licensing)를 통한 실효적 통제도 FEOC로 간주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배터리 공급망 내 중국 배제 강도를 높임



3. EU 역내 첨단기술·친환경 산업 육성 및 보호

- ▶ 핵심원자재법(11/13 잠정합의), 탄소중립산업법(3자 협의 중)
 - 2030년까지 전략원자재 역외 특정국 의존도 65% 미만 축소 및 태양광·풍력·배터리 등 탄소중립산업 40% 역내 생산 목표
- ▶ 반도체법 발효(9/21)
 - 2030년까지 세계 반도체 시장점유율을 확대(10%→20%)하는 것을 목표로 역내 반도체 산업 육성에 430억 유로 투입
- ▶ 중국산 전기차 대상 보조금 조사 직권 개시(10/4)



4. 중국, 보복조치로 반격하고 민간기업 통제 강화

▶ 갈룸·게르마늄(7/4) 및 흑연(10/20) 수출통제 발표

- 네덜란드 수출통제 공식화(6/30), 미국 수출통제 강화조치(10/17) 직후 핵심광물 수출통제 조치로 반격

▶ 희토류 가공 및 영구자석 제조기술 수출금지·제한 발표(12/21)

▶ 개정 반간첩법 시행(7/1)

- 국가안보·이익 관련 문건·데이터 등의 정탐·취득·불법제공 등을 간첩행위로 규정하고 처벌을 강화해 실사 등 기업활동까지 통제

▶ 데이터안전법 유예기간 종료 및 시행 본격화(9/1)

- 국가안보 등 관련 '중요 데이터'의 중국 내 서버 보관 의무화 및 당국 허가 없이 해외 반출·제공 금지



5. 한-미-일 경제·안보 협력 확대

▶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8/18)

- 반도체·핵심광물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상호 연계 운영, 향후 공급망 교란에 대한 정책 공조, 핵심신기술 협력 합의

▶ 일본,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포함시키며 원상복귀(6/27)

-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2019년 반도체 수출규제 및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후 약 4년 만에 수출통제 관련 갈등 해소



6. 양자·다자간 공급망 협력방안 논의 본격화

▶ IPEF 4개 분야(Pillar) 중 공급망 분야 타결(5/27)

- 청정경제, 공정경제 분야도 타결(11/16)되었으나, 무역 분야는 노동·환경 기준 개선 및 집행준수 방식에 대한 견해차로 미타결

▶ IPEF 참여국 간 '핵심광물 대화체' 출범 합의(11/16)

▶ 미, 영, EU 등 14개국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논의(10/12)

▶ 미, 인니와 핵심광물협정 체결(11/15), EU·영국과 협상중



7. 미-EU 주도로 높아지는 철강 탈(脫)탄소 무역장벽

▶ CBAM 전환기간 개시(10/1)

- 확정된 이행규칙(8/17)에 따라 수입업자는 수입상품 및 내재배출량 정보를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26.1월 본격 시행 예정

▶ GSSA 합의 결렬 및 협상시한 연말로 연장(10/21)

- 중국을 겨냥한 '친환경 철강클럽' 등 새로운 관세 체계 적용 방식을 두고 이견, 232조 쿼터(美) 및 세이프가드(EU)는 유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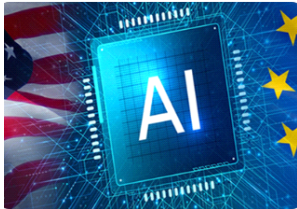
8.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의 부상

- ▶ 미·EU와 중·러 진영 중간에서 실리 추구하며 입지 다져
 - ‘글로벌 사우스 정상회의’ 개최(1/12)
 - G77+중국 정상회의 개최(9/15, 쿠바)
- ▶ 인도, ‘글로벌 사우스의 맹주’ 자임하며 지위 강화
 - ‘글로벌 사우스 정상회의’ 주도(1월, 화상)
 - G20 의장국으로서 공동선언 내 러시아 규탄 내용 관련 중재에 나서는 등 선진국-글로벌 사우스 가교 역할(10/9~10)
- ▶ 아프리카연합(AU) G20 가입(9/9), 브릭스 회원국 확대(8/24)



9.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중동 지역 정세 불안

- ▶ 하마스, 이스라엘 무력 침공(10/7)
 -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대한 지상작전을 지속하자 이란을 중심으로 반(反)이스라엘 기류가 강해져 확전 긴장감이 고조된 가운데, 인질 석방을 조건으로 한 일시휴전(11/24~27)
- ▶ 美·EU·英, 하마스 및 배후의 이란 등 겨냥 제재 지속
- ▶ 전쟁 발발 직후 유가가 일시 급등했으나 이후 안정세 회복



10. AI 거버넌스 표준 선점을 위한 경쟁 심화

- ▶ EU, AI법 의회 통과(6/14)
 - AI의 위험을 ▲허용불가 위험, ▲고위험, ▲저위험으로 구분하여 ‘허용불가 위험’ AI는 금지하고, ‘고위험’ AI는 엄격한 요구사항을 부과하는 등 차등 규제
- ▶ 美 바이든 대통령, AI 행정명령 서명(10/30)
 - 기업이 국가안보 등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AI 모델 개발 시 연방정부 통지 의무화 및 AI 생성 콘텐츠 식별 위한 워터마킹 등 인증 방침 도입

II. 2024년 통상환경 전망

1 Cold War, New Cold War, Hot War? 갈등의 표면화

1991년 독일의 록밴드 스킨피온스는 ‘변화의 바람을 들으며(listening to the wind of change) 세계가 가까워지고(the world is closing in) 형제처럼 가까워질 수 있음(we could be so close like brothers)을 느끼며 미래의 아이들이 꿈꾸는(children of tomorrow dream away)’ 뒤바뀐 세상, 즉 냉전의 종식을 노래했다. 냉전은 미국 중심의 자유민주 진영과 소련 중심의 공산 진영 간 이데올로기 대립을 의미한다. 냉전은 종식되기까지 약 45년이 걸렸으나, 불과 30여 년 만에 작금에 신냉전으로 불리우는 시기가 개막되었다. 피아 식별이 뚜렷하게 이루어졌던 구냉전과 달리 신냉전은 미-중, 미-러, EU-러 갈등이 있지만, EU-중 관계는 미-중 관계와 달리 그 대립의 정도와 분야가 다르다. 또한 중-러 관계도 구냉전 시대의 단합된 공산진영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냉전(冷戰, Cold War)은 무력충돌 없는 갈등으로도 해석되는데, 그렇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은 가자지구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현 상황은 가히 열전(熱戰, Hot War)로도 부를만큼 대량의 무력충돌과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는 수출통제와 경제제재 강화와 EU와 미국내 우크라이나 지지에 대한 이견으로 진영내 갈등도 내포하기에 이르렀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공습으로 시작된 가자지구 전쟁은 일시휴전에 돌입했으나, 단시간 양측에 막대한 인명피해를 발생시켜 원천적인 분쟁해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헤즈볼라와 이란 개입 시에는 과거 중동전쟁에 견줄 수 있을 만큼 국제정세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신냉전으로 불안정한 국제통상환경에서 가장 큰 변수 중 하나는 열전, 즉 대규모 무력충돌이 될 것이다.

1. 우크라이나 전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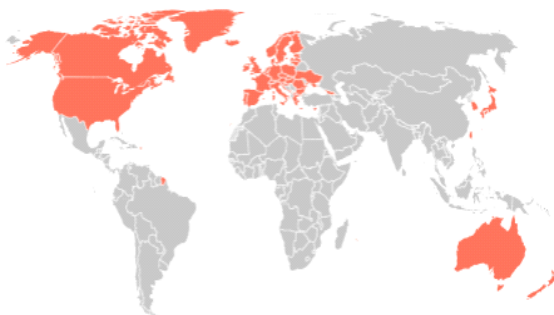
□ 배경 및 경과

- 우크라이나 전쟁은 '22.2.24. 푸틴 대통령의 특별군사작전 개시 명령 선포와 함께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시작
 -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위치와 전략적 중요성으로 인해 2014년 크림반도 합병과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 전쟁을 거치며 오랜 기간 갈등을 겪어왔음
 - 이 전쟁은 NATO의 동진 반대와 러시아의 영향권 복구라는 명분에서 출발하여 미국, EU 등 서방과 러시아 간 대리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우크라이나는 서방의 지원을 받으며 러시아에 대항하고 있으나 지리한 소모전으로 비화
 - 러시아의 대규모 군대와 초기 진격전으로 시작했으나, 양측간 공방이 지속되면서 대규모 인명피해와 막대한 전쟁 비용을 수반하는 소모전으로 확대되고 있음

□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압박 속 러시아도 보복 조치로 대응

- 美, EU를 중심으로 전 세계 46개국¹이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하면서 무역규제와 금융규제로 러시아를 압박
 - 한국도 대러시아 수출·금융제재 동참의사 표명('22.2.24.) 이후 총 5차례 걸쳐 제재를 강화
 - * 전략물자 수출 허가심사 강화('22.2.28.), 주요 은행·국고채 거래 중지 및 SWIFT 배제('22.3.1.), 중앙은행 거래 중지 및 주요 은행 거래 추가 중지('22.3.7.), 상항허가 대상품목 57개 지정('22.3.15.), 상항허가 대상품목 74개 추가 지정('23.4.24.)

<그림1. 對러시아 제재 부과 국가>



자료 : Castellum AI ('23.11.21 기준)

<표1. 러-우 전쟁 이후 주요국 對러 제재 현황>

순위	국가	제재 건수
1	미국	3,003
2	캐나다	2,714
3	스위스	2,220
4	영국	1,674
5	EU	1,636
6	프랑스	1,569
7	호주	1,262
8	일본	1,164

주 : 프랑스는 EU와 별개로 제재 부과

- 러시아는 수출통제, 천연가스 공급 제한, 흑해 곡물협정 파기, 비우호국 지정 및 기업 제재 등의 보복성 조치로 대응
 -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회원국, 압하지야, 남오세티야²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 대한 반도체 소자, 전자IC 등 219개 품목 수출금지, 281개 품목 수출제한을 발표('22.3.9.)
 - *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은 구소련권 국가들 간의 다각적인 협력 증진을 위해 창설한 경제공동체로서,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 등 5개국으로 구성. **압하지야** 및 **남오세티야**는 러시아에 인접하며 조지아 영토 내 위치한 미승인국.
 - 주요 가스관 노르트스트림(Nord Stream) 운영을 중단하여 유럽 내 에너지 원자재 수급 불확실성을 초래한 바 있으며, 흑해 곡물협정을 파기하며 우크라이나산 농산물의 수출 차질을 야기
 - * **흑해 곡물협정**은 전쟁으로 중단된 흑해 항로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재개 협정으로, '22.5.17. 튀르키예와 유엔의 중재로 체결되고 세 차례 연장되었으나, '23.7월 러시아가 연장을 거부하며 흑해 재봉쇄. 우크라이나는 임시항로를 개설하여 이용중이나, 러시아 공격에 노출되어 있어 운임 상승과 곡물 공급 등을 초래
 - 미국, EU, 한국 등 48개국을 비우호국³으로 지정하여 해당국 기업의 자산 통제 및 외화 유출 방지, 비우호국 출신 비거주자의 출입국 제한, 러시아 현지 진출기업 철수 시 출국세 부과 등의 보복조치 단행

* 미국, EU 27개국, 한국, 영국, 호주, 알바니아,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 노르웨이, 싱가포르, 대만, 우크라이나, 아 이슬란드, 안도라, 리히텐슈타인, 미크로네시아, 모나코, 산마리노, 북마케도니아, 대만, 몬테네그로.

□ 전쟁 장기화의 영향 및 2024년 전망

- 전쟁 장기화로 국제사회의 대러 제재가 수위를 높여가고 있으나, 중국과 인도, 일부 중동 국가는 오히려 러시아와의 관계를 지속하며 협력을 강화하는 추세
 - 러시아는 국제정치적, 경제적 고립을 타개하기 위해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등으로 대표되는 BRICS, OPEC+,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하며 미국·EU 진영에 대응¹⁾
 - 그 결과 중국, 인도는 에너지 원자재 중심으로 대러 수입이 급증하였으며, 특히 중국은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에너지, 교역, 금융 부문에서 러시아 시장 내 영향력을 확대 중
- 양측 모두 쉽사리 물러설 수 없는 상황으로, 조기 휴전 및 종전은 어려울 전망
 -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반격하기 위한 첨단무기 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나, 서방의 지속적 지원이 전쟁의 상시화를 초래하거나 최악의 경우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을 고려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우크라이나의 EU 가입과 러시아의 강제 점령 영토 인정 등을 담은 정전협정이 논의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있지만, 미국과 EU의 적극적인 지지와 개입 없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전망이다²⁾
 -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에 대한 EU 회원국 간 이견 존재³⁾와 '24.3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점도 교착상태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운 이유
- 미국, EU 등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회의론 대두, 가자지구 개전으로 국제사회 관심이 중동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은 서방의 지원에 의존하는 우크라이나에 부담을 가중
 - 공화당 강경파 중심으로 전쟁 지원 예산 삭감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EU에서도 탄약 100만발 지원 약속을 지키기 어려울 수 있다는 언급 발생⁴⁾
 - 미중 패권 경쟁 속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지정학적 긴장이 확대되는 가운데, 가자지구 전쟁 발발로 국제사회의 진영간 갈등과 경제블록화가 가속화될 전망이다⁵⁾
 - 미중 갈등 사이에서 한쪽 편에 서지 않고 글로벌 사안에 따라 실리를 챙기며 입지를 다지기 시작한 글

1) 신범식(2023.4.24.), “[러·우크라 전쟁 1년, 국제정치 구도 격변] 국운 건 러시아 vs 퇴로 없는 우크라, 길고 지루한 소모전 끝낼 해법이 안 보인다”, 중앙선데이.

2) 김겨레(2023.11.22.), “우크라이나 EU 가입 난항…대규모 군사 지원도 이견”, 이데일리.

3) EU 가입에 27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동의해야 하나, 親러 성향의 헝가리, 슬로바키아로 인해 논의가 쉽지 않을 전망.

4) 정빛나(2023.11.15.), “우크라 고전하는데...EU ‘탄약 100만발 지원’ 결국 흐지부지되나”, 연합뉴스.

5) Euractive(2023.2.14.), “How Russia’s invasion of Ukraine changed geopolitics”, Euractive.

로벌 사우스(Global South)의 움직임도 주목할 필요

- 전쟁 장기화는 추가 경제제재를 야기할 수 있어 주요국의 대러 제재 현황을 모니터링하며 직간접적 영향에 대비하는 한편, 종전 시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에도 대비할 필요

*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 사업은 총 7,500억 달러 규모에 달하며, 주거지 복구, 물류망 재구축, 에너지 공급 및 그린전환 등 총 850여개의 프로젝트가 진행될 전망(Recovery of Ukraine, <https://recovery.gov.ua/en>)

<그림2. 우크라이나 전쟁 - 점령 지역 변화>

(’22.2월) 러시아 침공 이전



(’22.3월) 러시아의 신속한 침공 및 점령



(’22.11월) 우크라이나 점령지 탈환



(’23.11월) 우크라이나의 진격



- 러시아 점령 지역
- 우크라이나 탈환 지역
- 러시아의 제한적 점령 지역
- 러시아의 크림 합병(2014)
- 친러 반군 세력 지역

자료 : BBC News

주 : Institute for the Study of War 자료 가공


2. 중동 긴장

(1) 가자지구 전쟁의 발발

□ 이스라엘을 향한 하마스의 무력 침공('23.10.7.) 후 이스라엘의 보복으로 가자지구 전쟁 발발

○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는 유대교 안식일 새벽, 이스라엘에 대대적 공격을 감행하였고 이에 대해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대한 보복 공습으로 대응

- 2009년, 2014년에 이어 세 번째 가자지구에서의 지상전 돌입⁶⁾

<참고1. 팔레스타인과 하마스, 그리고 가자지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 미국, 캐나다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3년부터 유엔 비회원 옵서버 국가(state) 지위 획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안지구(West Bank)와 가자지구(Gaza)에 대한 주권을 주장 ▶ 하마스는 1987년 창설된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로, 이집트와 함께 2007년부터 가자지구를 장악 ▶ 가자지구는 이스라엘과 이집트 사이에 위치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대표적 분쟁 지역 	

○ 이스라엘이 유엔의 인도주의적 휴전(humanitarian truce) 요구⁷⁾와 미국의 중재로 최소한의 인도적 지원과 포로 석방을 위한 휴전기간을 가졌으나, 다시 이스라엘의 대대적 공습으로 전황이 악화되고 장기화될 가능성도 커짐

- 전쟁의 여파로 인적·물적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전쟁이 장기전으로 접어들면 유가 상승과 함께 세계 경제에 전반적 악재 도래할 가능성

- 하마스 지지측인 예멘 후티 반군의 홍해 통행 선박에 대한 무분별 공격으로 물류 불안이 심화되고 있으며,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국제 운임·유가 상승 우려

○ 이스라엘 지지국 및 이에 대항하는 중동·이슬람 국가들이 개입할 경우 전쟁의 파장은 더욱 커질 수 있음

- 과거 중동지역의 분쟁 발생시 유가가 가파르게 상승한 바 있어, 전쟁 상황 및 에너지 가격동향을 예의주시하고 대비할 필요

6) 2009년 1,400명 이상, 2014년 2,100명 이상의 팔레스타인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며, 2023년 전쟁 발발로 인한 양측의 사망자는 '23.11월 기준 1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

7) UN News(2023.10.26.), "UN General Assembly adopts Gaza resolution calling for immediate and sustained 'humanitarian truce'", UN.

<표2.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대한 주요국 핵심입장>

국가	핵심 입장
미국	- 전통적인 이스라엘 지지국으로 이스라엘 지지 선언 및 군사지원에 대한 의지 - 항모전단의 이동, 군장비 지원 약속 및 장관급 인사의 순방을 통해 대응 논의 - 최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개별 독립 주권 국가로 공존하는 '2국가 해법' 지지 선언
이란	- 하마스의 테러 공격을 '정당방위'로 상정 - 이스라엘의 북부 국경에서 레바논에 기반을 두고 있는 친이란 무장 조직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간 총격전 발생하는 가운데 가자지구의 상황이 악화될 경우 개입할 것임을 경고
사우디아라비아	- 이스라엘의 수교국으로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입장이나, 가자지구에서의 교전이 확대됨에 따라 이스라엘에 대한 비난 확대 - 러시아와 원유시장 안정책 논의

자료 : 연합뉴스(2023)

(2) 전쟁과 석유파동

- 주요 에너지 공급처이자 운송경로에 위치한 중동지역은 역사·종교적으로 갈등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세계의 화약고'로 4차례의 중동전쟁과 걸프전 등 다수의 무력충돌이 발생
 - 특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분쟁은 제1차 세계대전 시기 영국의 상호 모순적 행보⁸⁾에서 비롯되었기에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서방·동구권 국가들의 개입 빈번
- 1~3차 중동전쟁을 거치며 이스라엘과 주변국의 적대관계가 고착화되었으며 아랍국가들의 '자원 무기화'도 진행
 - 특히 1967년, 이스라엘과 이집트 사이에서 발발한 3차 중동전쟁에서의 이스라엘 압승은 중동지역에 큰 파장을 일으킴
 -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등 전략적 요충지를 확보하며 압승함으로써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등 아랍 국가들의 적대관계가 확고해짐
 - 아랍 산유국들은 이스라엘 우방국인 미국·영국·서독 등을 상대로 석유금수 조치를 시행하였으나, 효과를 보지 못함
 - 이에 '68.1월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리비아는 상호 단결강화 및 경제협력을 위해 OPEC 설립

8) 아랍인의 독립 국가 건설 지지를 표명한 맥마혼 선언(McMahon Declaration, 1915)과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대인들을 위한 민족적 고향을 설립에 동의한 벨푸어 선언(Balfour Declaration, 1917).

<참고2. 석유 관련 국제 협의체>

- ▶ **석유수출국기구(OPEC)** : 1960년 이라크·이란·사우디아라비아·쿠웨이트·베네수엘라의 5대 석유 생산·수출국 대표가 모여 결성한 협의체로, '23.12.21. 앙골라의 탈퇴 발표로 '23.12월 현재 회원국은 12개⁹⁾
- ▶ **OPEC+** : OPEC 회원국과 기타 주요 산유국인 러시아, 멕시코 등을 포함하며, 원유 감산·증산 결정
- ▶ **아랍석유수출국기구(OAPEC)**: 아랍 산유국의 경제협력을 목적으로 쿠웨이트, 리비아, 사우디아라비아의 주도하에 결성되었으며, 현재 회원국은 10개¹⁰⁾

자료 : 외교부, 에너지경제연구원(2014), Britannica

□ (1차 석유파동) '73.10월 제4차 중동전쟁을 계기로 중동 산유국들이 원유 감산, 가격인상, 금수 등 자원 무기화를 단행하며 1차 석유파동 촉발

- (배경) 이스라엘에 대한 이집트의 기습적 선제공격으로 4차 중동전쟁 발발
- (내용) 아랍석유수출국기구(OAPEC)는 ▲단계적 원유 감산¹¹⁾과 ▲가격 인상¹²⁾, ▲이스라엘 지지국에 대한 금수조치를 실시하며 석유무기화를 천명
- (결과) 유가는 4배 이상 급등하였고, 중동 산유국의 석유 무기화 전략 본격화
 - 유가 급등과 공급 차질에 따른 에너지 위기 및 인플레이션 촉발
 - 석유를 경제적 차원이 아니라 국가안보 측면에서 봐야 한다는 '석유안보' 공감대 형성
 -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 설립

□ (2차 석유파동) 이란 혁명('78.10월)과 이란-이라크 전쟁('80.9월) 발발을 계기로 2차 석유파동 발생

- (내용) 이란혁명으로 촉발된 이란의 원유 생산량 감소¹³⁾, 이란-이라크 전쟁¹⁴⁾ 및 예방적 원유 수요의 폭증
- (결과) '78.12월~'80.7월 석유가격은 배럴당 \$12.9에서 \$31.5로 급등했으며, 이란-이슬람 전쟁('80.9월)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무기화 선언'('81.1월)의 영향으로 \$39.8까지 추가 상승

9) 알제리, 콩고 공화국, 적도 기니, 가봉,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리비아, 나이지리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베네수엘라

10) 알제리, 바레인, 이집트, 이라크, 쿠웨이트, 리비아,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랍에미리트.

11) 이스라엘이 아랍 점령지역에서부터 철수하고 팔레스타인의 권리가 회복될 때까지 매월 원유생산을 전월에 비해 5%씩 감산

12) 배럴당 \$3.01에서 \$5.12 ('73.10.6.) \$5.12에서 \$11.65('74.1.).

13) 1979년 1월까지 1일 480만 배럴씩 감소. 이란은 당시 전세계 석유 수출의 15% 수준을 점하고 있었으며, 해당 시기 감소량은 전 세계 원유 생산량의 7%에 해당.

14) 전쟁 초기 이란과 이라크가 원유 공급을 중단.

<그림3. 국제유가 추이 ('70~'23)>



자료 : World Bank Commodity Price Data (2023.11.3. 검색)

*3개 유종의 월간 평균가격 기준

- 석유파동으로 이어진 두 차례의 분쟁 외에도 걸프 전쟁('90), 이라크 전쟁 ('03) 등 중동지역의 분쟁은 필연적으로 큰 폭의 유가 변동 불확실성을 야기
- 걸프 전쟁은 장기적인 유가 충격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나, 공급 차질로 인해 '90.8월 이전까지 배럴당 약 17달러였던 유가는 동년 10월 34달러까지 상승

(3) 석유와 통상정책

- (미국) 국가안보에 대한 우려로 석유수입할당제도('59-'73)와 원유수출규제제도('75-'15)를 운영
 - 1950년 이전까지 미국은 원유 순수출국이었으나, 이후 석유 수요 급증으로 순수입국이 됨
 - 1950년대 후반부터 석유 수입의존도가 상승해 국가안보가 우려되자 1959년 석유수입할당제도 도입
 - 1973년 OAPEC이 주도한 對미국 원유 수출금지조치 도입으로 큰 타격을 입은 뒤 수출금지를 원칙으로 하는 원유수출규제를 본격 도입
 - '15.12월 '미국산 원유에 대한 수출규제 해제조항'이 의회에서 통과되기 전까지 미국산 원유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상무부 수출관리규정(EAR)의 예외조항에 포함시키는 사실상 수출면허제가 적용됨
- (아랍 산유국) 친이스라엘 국가에 대한 보복 수단으로 석유 금수조치 발동
 - 이집트의 1956년 수에즈운하 국유화 이후 이집트와 안보협정을 맺은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집트에 대하여 보복 공격을 감행한 영국과 프랑스에 대한 석유수출을 금지('56)

- 이스라엘에 대한 서방국의 군사지원을 차단하고자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 등 일부 아랍국은 미국, 영국, 서독에 대한 석유금수조치를 단행('67)
- 참여국들의 감축이 동반되지 않았던 '56, '67의 석유금수와는 달리 OAPEC의 주도하에 산유량 감축과 석유금수가 동시에 이루어짐('73)

(4) 전망

- 70년대의 원유 시장은 공급자가 가격을 결정하는 대표적인 '판매자 시장'(seller's market)이었으나, 최근 ▲석유 공급원 다변화, ▲글로벌석유 의존도 변화 등을 통해 성격이 달라지고 있음
- 국제석유시장에서 OPEC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시장지배력의 다기능화가 진전됨에 따라 非OPEC+ 산유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
- 천연가스, 원자력 등 대체에너지 비중이 늘고 전기차 판매 증가로 석유 소비 증가세가 둔화됨
- 주요국의 전략비축유 확보 강화 및 석유 선물시장의 발전으로 인한 유가 결정의 투기적 요인 증대 등 시장에서의 변화도 두드러짐
-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23.11월까지의 글로벌 석유 공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가운데¹⁵⁾, 제3차 석유파동의 가능성도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
- 전쟁 당사국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산유국이 아니므로 양측간 분쟁이 원유 수급에 당장 큰 차질을 발생시킬 가능성은 희박
 - 국제유가는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발생 직후 4%대의 상승률을 보이며 일시 급등했으나, 이후 등락을 반복하다 원유 수요감소 기대로 하향 안정화 추세¹⁶⁾
- 과거 중동전쟁 사례와 달리, 아랍권 국가들의 팔레스타인 지원 가능성은 높지 않음
 - 이스라엘과의 대표적인 적대국인 레바논 등이 '이스라엘에 대한 석유 공급 중단 및 단교' 등을 주장했으나, 이스라엘 수교국¹⁷⁾들은 이를 거부
 - 이는 중동전쟁 이후로 아랍권 국가들이 이스라엘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미국으로부터 취해온 정치·경제적 이득이 많기 때문¹⁸⁾

15) IEA(2023.11.), Oil Market Report, IEA.

16) 이지현(2023.11.17.), "원유 수요감소 기대에 국제유가 5% 가까이 급락", 연합뉴스.

17) 이집트, 요르단, 아랍에미리트(UAE) 등.

18) 신은별(2023.11.12.), "'형제보단 국익'... '입으로만' 이스라엘 압박한 이슬람·아랍 지도자들", 한국일보.

□ 그러나 아랍권 국가의 참전 가능성을 전면 배제할 순 없어 ▲단기전, ▲제한적 전선 확대, ▲이스라엘-이란 전쟁으로의 확전 등 가능한 시나리오별로 영향과 대응방안을 검토할 필요

○ '23.11월 중순 기준 국제유가는 약 \$83로, '23.9월(\$92.22)이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음

<표3.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시나리오별 전망>

시나리오	주요 내용	국제유가에 미치는 영향*	
		공급량 감소율	유가 상승률
단기전	가자지구 내부에서의 단기전으로 종결	0.5%~2%	3%~13% (배럴당 \$3~\$12)
제한적 전선 확대	(이스라엘) 가자지구 점령과 하마스 지도부 축출을 위해 장기전을 전개	3%~5%	21%~35% (배럴당 \$19~\$31)
	레바논, 시리아 등 시아파 무장세력 등으로 전선 확대하지만 이란 비참전		
이스라엘-이란 확전	(이스라엘) 이란을 하마스 공격배후로 특정해 선제공격 (이란) ▲원유수출 중단,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대응할 가능성 · 서방세계와 아랍 사이의 갈등으로 확산 *세계 해상 석유 수송량의 35% 차지	6%~8%	56%~75% (배럴당 \$50~\$67)

*2023년 4분기 공급량 및 기준선(baseline, \$90) 대비

자료 : 국제금융센터(2023), The Guardian(2023), Bloomberg(2023), World Bank(2023)

○ 지난 1·2차 석유파동의 원인 역시 전쟁이었으며, 현시점 종전으로의 출구전략이 나오지 않아 새로운 석유 위기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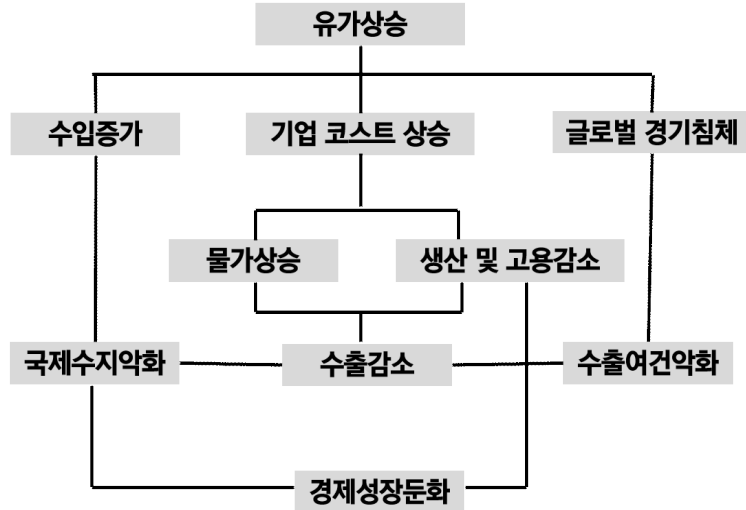
- 특히 글로벌 원유 공급의 가장 중요한 해상로인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란의 개입이 관건으로, 이란이 전쟁에 개입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 국제유가와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음¹⁹⁾
- 미국이 하마스의 공격과 이란이 연관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금수조치 등 對이란 원유 수출 제재를 강화해 글로벌 원유공급 부족 상황을 야기할 수 있음

□ 세계 4위의 원유수입국인 한국은 유가 변동폭에 따라 수출입 여건 및 거시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더욱 민감

19) 김동규(2023.11.8.), "이란 참전시 유가 150달러 간다...대응책 필요", 연합뉴스.

- 대표적인 원유수입국인 우리나라는 특히 중동 원유 의존도가 높음
 - 중동산 원유 의존도는 2017년 81.7%까지 상승하였으나 2021년 59.8%까지 하락
 -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러시아 원유수출이 제한되자 대중동 원유 의존도는 `23.9월 기준 72.8%까지 상승²⁰⁾

<그림4. 국제유가 상승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자료 : 산업자원부(2003)

- 유가 상승은 수입물가 상승 및 기업의 생산비용 증가를 초래할 뿐 아니라, 고유가 장기화와 글로벌 경기 침체는 주요국의 수입수요를 감소시켜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발생시킬 수 있음

20)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2023), <https://www.petronet.co.kr/>.

<참고3.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철강 공급망의 변화>

1. 우크라이나 전쟁

□ EU의 러시아 제재 및 우크라이나의 생산·공급감소로 EU로 수입되는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산 철강은 중국, 한국 등 아시아지역 원산지 상품으로 대체되는 등 공급망이 변화²¹⁾

○ EU의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철강 수입은 한국, 중국, 튀르키예 등 아시아 국가의 철강으로 대체

- '22년 봉형강류(long product)의 러시아(49.5%) 및 우크라이나(9.7%)의 대EU 수입이 감소한 반면 한국(21.4%), 중국(90.3%), 튀르키예(33.6%) 및 인도(76.6%)의 대EU 수출은 증가

- '23년 1~4월까지의 EU의 봉형강류 수입은 지난해 대비 25% 감소하였는데 한국(54.8%)과 중국(108%)의 대EU 수출이 증가하는 반면 튀르키예*(54%)와 인도(37.3%)의 대EU 수출은 감소

* 대부분의 튀르키예 열연코일(Hot-rolled coil) 생산업체가 러시아산 슬라브(Slab) 등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EU의 러시아산 사용 제3국 제품에 대한 제재는 특히 튀르키예 철강산업에 큰 타격을 줄 전망²²⁾

○ 러시아의 경우 제재대상 철강제품의 대EU수출이 감소하는 반면 제재대상이 아닌 품목은 수출이 증가²³⁾

- EU는 러시아산 완제품과 반제품 및 러시아 원산지 제품으로 만들어진 제3국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며, 제3국에서 상품 가공에 사용되는 철강제품의 투입물에 대한 원산지 증명 의무를 부여하는 등 제재를 강화²⁴⁾

- '22년 대비 철강반제품은 40.8%, 철광석(iron ore)은 84.9%, 합금철(ferroalloy)은 79.3%, 고철(scrap)은 73% 감소하고, 제재 대상이 아닌 선철(pig iron)은 25.3% 증가

□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되어 철강 수요가 증가할 경우 한국 철강 산업은 이익을 얻을 가능성

○ 우크라이나 인프라 및 건설 부문 재건에 29조~30조원 규모의 철강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전 세계철강 수요의 2~3% 수준)²⁵⁾

- 한국정부는 민관 합동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대표단'을 구성하고 '6대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우크라이나 재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선진국과의 경쟁, 지정학적 요건, 수익성에 대한 불확실성 등 우려도 존재²⁶⁾

2. 가자지구 전쟁

□ 가자지구에서 전쟁이 장기화 될 경우 글로벌 경기침체가 불가피하며 석유, 철강 및 원자재 공급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²⁷⁾

- 동 전쟁이 당장 세계 경제에 미치는 여파는 미미하나 제3국 개입으로 확전이 될 경우 유가가 급등하는 등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
 - 국제통화기금(IMF)은 동 전쟁의 경제적 여파로써 해당 지역 뿐 아니라 이집트, 레바논, 요르단 등 이웃 국가들의 무역과 경제에 이미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분쟁이 확대될 경우 인플레이션을 초래하고 세계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²⁸⁾
- 공급망 불확실성으로 세계 철강 가격이 변동될 경우 인도 및 튀르키예 등 이스라엘과 무역관계에 있는 국가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
 - 인도상공회의소(PHDCCI)는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으로 위기가 고조되면 병목 현상, 운임 상승 등 무역로와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을 미쳐 인도의 철강, 비료 및 유기화학 부문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²⁹⁾
 - 튀르키예는 이스라엘에 철근, 선재, 압연 등을 수출하며, 이스라엘로부터 고철을 대량으로 수입³⁰⁾

21) Yuriy Grigorenko(2023.8.18.), "Asian producers have replaced the supply of long products from Russia to the EU", GMK Center.

22) '23년 1~4월 튀르키예로 수입된 8,4200mt 슬라브 중 64%가 러시아산이며, 같은 시기 수입된 약1.4백만 톤의 빌릿 중 43%가 러시아산. Halina Yermolenko(2023.7.27.) "A new round of EU sanctions may affect Turkish steelmakers", GMK Center.

23) '23년 1~7월 러시아의 대EU 수출은 16.5억 유로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 Yuriy Grigorenko(2023.10.13.), "How sanctions affect the import of Russian steel products to the EU", GMK Center.

24) EU는 러시아 원산지의 완제품(강판, 냉간 압연 강판, 강철재, 일부 용접·무용접 파이프 등) 및 HS코드 72-73에 포함된 반제품 수입을 금지(철강합금, 고철, 철광석 등 일부 원자재는 예외)하며, 러시아산 제품으로 만들어진 제3국 철강 제품의 수입을 금지.

25) 이우진(2023.6.26.),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소고", 위클리 철강금속, 유진투자증권.

26) 김승수(2023.9.19.),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가시화에... '기대'·'우려' 팽팽", 대한경제.

27) The Economic Times(2023.10.10.), "Israel-Hamas war may impact steel, fertilizer, organic chemicals sectors", The Economic Times.

28) Abeer Abu Omar(2023.10.25.) "IMF Warns on Prolonged Middle East War, Higher Rates for Longer", Bloomberg.

29) The Economic Times(2023.10.10.).

2 리더십의 변화 : 슈퍼 선거의 해

2024년은 주요국의 대선과 총선이 집중된 ‘슈퍼 선거의 해’다. 4월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약 40개국에서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1월에는 반중 성향의 집권 여당 민진당에 맞서 친중 성향의 국민당과 균형외교를 주장하는 민중당간의 연대 가능성이 선거 결과를 좌우할 대만 총통 선거가 실시된다. 2월에는 친기업 성향의 조코위 대통령의 재선이 걸린 인도네시아 대선과 총선이 치러지며, 3월에는 시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지만 법률상으로는 예정되어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대선이 있다. 4월에는 인도 총선이, 6월에는 EU와 멕시코에서 선거가 치러진다. 국내 지지도가 낮은 기시다 총리의 연임여부가 갈릴 자민당 총재 선거가 9월 일본에서 예정되어 있다.

2024년 선거 중 무엇보다 가장 큰 파급력을 갖는 선거는 11월 5일 실시될 미국 선거다. 4년 임기의 대통령 선거와 6년 임기의 상원의원 선거(100석 중 1/3), 2년 임기의 하원의원 선거(435석)가 치러진다. 아직 양당의 대통령 후보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2020년에 이어 바이든 現대통령과 트럼프 前대통령의 재대결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여론조사가 긍정적 평가보다 부정적 평가가 많고, 트럼프 전대통령과의 지지도 조사에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 재선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미국 대선은 주별로 승리한 후보가 선거인단을 확보하는 승자독식제인 점과, 최근 미국 대선이 선거시점에서의 정국(政局)과 인물에 따라 지지정당과 후보를 바꾸는 소위 ‘스윙 스테이트(swing state)’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전체 득표수에서 앞섰지만 선거인단 과반을 확보하지 못해 진 2000년 선거(부시 vs 고어)와 2016년 선거(트럼프 vs H.클린턴)를 상기해보자. 스윙 스테이트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후보들이 해당 지역을 의식해 발표할 공약에도 대비가 필요하다. 선거가 치열해질수록 후보간의 공방 외에 외부의 적을 겨냥한 날선 수사에 일희일비하기 보다는 냉철한 분석으로 선거 이후 4년을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한 해가 될 것이다. 미국의 34대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공화국(미국)의 미래가 미국 유권자의 손에 달려있다(The future of this republic is in the hands of the American voter.)’고 했는데, 최근 미국발 통상 리스크를 고려한다면 우리 통상환경의 일부도 미국 유권자의 손에 달려있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닐 듯 하다.

<표4. 2024년 세계 주요 선거 일정>

일 자	주요 내용	관전 포인트
1월 13일	대만 총통 선거	반중 성향의 집권 민진당 라이칭더 승리 여부
2월 14일	인도네시아 대선 및 총선	조코위의 친기업 정책 계승 vs. 이슬람 보수주의
3월 17일	러시아 대통령 선거	푸틴 재출마 및 5기 연임 여부
3월 31일	우크라이나 대통령 선거	전쟁으로 인한 연기 가능성 및 젤렌스키 재출마 여부
4~5월	인도 총선	높은 지지율로 2014년부터 집권 중인 모디 총리 3연임
6월 9일	EU 유럽의회 선거	마린 르펜 등 유럽 극우파의 대두
6월	멕시코 대통령 선거	사상 첫 여성 대통령 탄생 가능성
9월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	지지율 떨어지는 기시다 연임 여부, 10월 중의원 선거
11월 5일	미국 대통령 선거	바이든 vs. 트럼프 재대결

자료: 언론보도 종합

30) 김진영(2023.10.12.), “세계 철강산업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공급망 전체 악영향’”, 글로벌이코노믹.

1. 미국

(1) 바이든과 트럼프의 리턴 매치?

-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前대통령은 2024년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로, 두 전·현직 대통령이 양당 후보로 확정될 경우, 1956년 대선* 이후 68년 만에 같은 후보 간 재대결이 될 전망이다
 - *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아들라이 스티븐슨 前 일리노이 주지사(미국 유엔대사) 간 재대결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함
- 민주당의 경우 현직 대통령에게 도전할 당내 후보가 없는 상황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가 되는 것은 거의 확실시되고 있으며, 트럼프 前대통령은 고정 지지층(약 40%)과 높은 인지도로 가장 유력한 공화당 대선 후보로 평가됨
 - 초반에 두각을 나타내던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와의 최근 인지도가 상승 중인 니키 헤일리 前UN대사도 트럼프 前대통령을 위협할 수준이 못되며, 기타 후보들은 존재감 부재
 - 무소속 대선 출마를 선언한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는 제3의 후보로서 선거 판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목받고 있음

<표5. 2024 미국 대선 관련 일정>

1/15	공화당 경선 시작 (아이오와주 코커스)	7/15~18	공화당 전당대회, 후보 선출 (위스콘신주 밀워키)
2/3	민주당 경선 시작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예비선거)	8/19~22	민주당 전당대회, 후보 선출 (일리노이주 시카고)
3/5	“슈퍼 화요일” 공화당·민주당 15개주 경선	11/5	대통령 선거

(2) 주요 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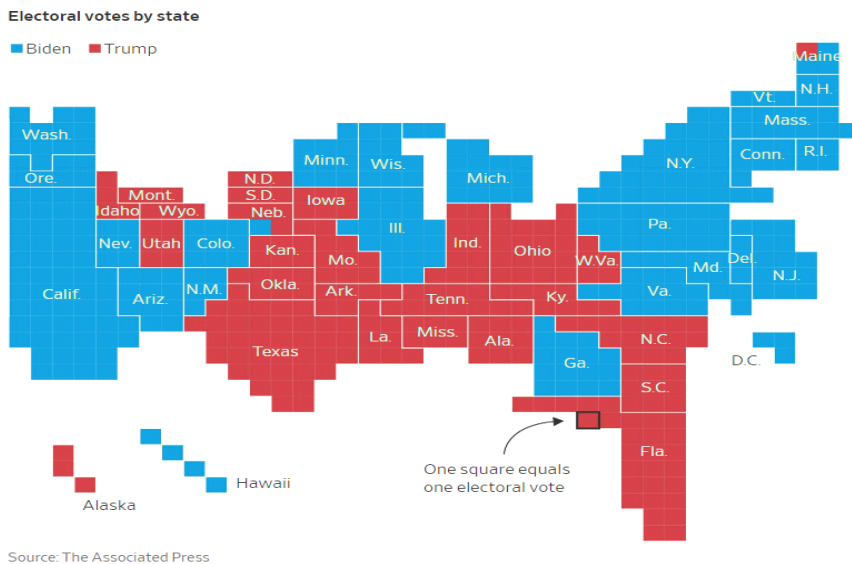
□ 미국 선거인단 구성 변화

- 2020년 인구조사(Census)에 따라 미국 선거인단(Electoral College) 구성이 변경되어 미국 대선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미국은 직선제(popular vote)와 선거인단에 의해 치러지는 간선제가 혼합된 방식으로 대통령을 선출하고 있어, 특정 후보가 전체 득표수에서 더 많더라도 50개 개별 주(State)에 할당된 선거인단(538명)의 과반수(270명)를 확보하지 못하면 당선되지 못함
 - (예) 2016년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前 국무장관이 전체 득표 6,415만 표로 트럼프(6,223만 표)를

약 192만 표 앞섰지만, 트럼프(290명)보다 적은 수의 선거인단(230명)을 확보해 당선에 실패

- 2024년 대선 선거인단에서 공화당 강세 지역(텍사스, 플로리다)의 인구가 증가해 선거인단이 추가된 반면, 민주당 강세 지역(캘리포니아, 뉴욕)은 인구 감소로 선거인단을 잃음
 - 선거인단 수는 주별 인구에 비례하며, 각 주의 연방 상원(2명)과 하원 의원 의석수(선거구) 합계와 동일
 - * <+2명> 텍사스(40명), <+1명> 콜로라도(10명), 플로리다(30명), 몬태나(10명), 노스캐롤라이나(16명), 오리건(8명), <-1명> 캘리포니아(54명), 일리노이(19명), 미시간(15명), 뉴욕(28명), 오하이오(17명), 펜실베이니아(19명), 웨스트버지니아(4명)
- 선거인단 구성 및 주별 인구 분포 변화로 2024년 대선 주요 격전지인 경합 주(swing state)도 바뀔 전망
 - 미국 언론은 애리조나,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 조지아 등을 경합 주(swing state)로 보고 있으며, 그밖에 네바다와 노스캐롤라이나도 격전지(battleground)가 될 것으로 주목하고 있음
 - * 2016년 트럼프를 지지했던 애리조나, 조지아,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은 2020년 대선에서 바이든을 선택했으며, 네바다와 노스캐롤라이나는 최근 선거에서 박빙의 승부를 거친 바 있음
 - * 전통적인 공화당 지역인 애리조나는 라틴계 인구가 늘면서 2020년 대선 당시 민주당이 강세를 보였으며, 조지아는 트럼프의 백인 유주 선거운동이 유색인종 유권자들을 소외시키면서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했음

<그림5. 2020년 美 대선 당시 미국 주별 선거인단 투표 결과>³¹⁾



31) Alyssa Lukpat(2023.10.30.), "Your Guide to the Presidential Election in 2024", Wall Street Journal.

□ 정치 양극화 심화 및 후보자 리스크

- 미국 내 정치적 양극화 심화로 기성 정치에 실망한 중도층과 진보·보수 양극단에 있는 유권자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전망
 - 트럼프 전대통령의 강성 지지층인 ‘마가’(MAGA: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가 결집하며 변함없는 지지를 보여주는 한편, 공화당 내에도 트럼프의 각종 사법 리스크 우려와 반트럼프 성향을 보이는 유권자도 있어 이들의 표심을 주시할 필요
 - 트럼프 전대통령은 기밀문서의 불법 유출, 2020년 대선 반복 시도와 관련된 연방사건(2건), 2020년 대선 당시 조지아주 선거인단 투표 조작 시도 등 4개 형사사건에서 총 91건의 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지만, 무죄를 주장하며 자신에 대한 기소를 선거 개입이라고 항변 중
 - 이러한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면 대선 전에 유죄 선고를 받거나 수감될 수 있으며, 수감 시 대선에 출마할 자격은 인정되나 당선 시 선례가 없어서 극심한 정국 혼란에 빠질 가능성
 - 바이든 대통령은 고령의 나이(2024년 82세)와 건강 문제, 아들 헌터 바이든 관련 이슈가 영향 미칠 전망
 - 민주당 계열이나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로버트 F. 케네디*가 2024년 대선에서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커지고 있음
 -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나, 코로나19 백신 음모론을 주장한 이력이 있어 트럼프를 지지하는 극우성향 표를 분산시킬 가능성도 있음
- * 정치 명문가 케네디 가문 출신으로 환경 전문 변호사이자 반백신주의자로 ‘코로나 음모론’을 주장했음. 미국 언론은 케네디 후보가 1992년 대선에서 약 19% 득표율을 기록한 로스 페로(Ross Perot) 이후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무소속 후보가 될 것으로 평가

□ 국내 이슈 및 대외 환경

- 미국 유권자들이 정당보다 후보자 개인을 선택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경제 상황, 낙태권 인정 여부, 이민정책 등 국내 주요 이슈와 더불어 대외정책에 대한 후보자 입장과 공약도 대선 판도에 영향을 미칠 전망
 - 최근 2020년 대선 당시 트럼프를 지지했던 주에서 낙태권을 주 헌법에 명시하고, 주의회 선거에서 민주당이 강세를 보이는 등 낙태권이 중도층과 유권자에게 중요 이슈로 등장
- * 2022.6월 미국 연방대법원은 임신 6개월까지 낙태를 연방 차원에서 합법화한 로 대 웨이드 판결(Roe v. Wade)을 폐기하면서 낙태권 존폐를 주정부에서 정하도록 판결함
-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및 가자지구 전쟁 발발도 대선 판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트럼프 전대통령보다 현직의 바이든 대통령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

- 美 의회 내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회의론 대두, 가자지구 전쟁 초기 바이든 대통령의 이스라엘 지지 발언으로 일부 지지층의 이탈 가능성 확대 우려

* 미국 아랍아메리카연구소(AAI) 여론조사 결과, 바이든에게 투표하겠다고 응답한 아랍계 미국인이 2020년 59%에서 2023년 17.4%로 대폭 감소³²⁾

(3) 대선 결과에 따른 영향 전망

□ 대외정책

- 정권에 상관없이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기조를 바탕으로 강한 대중 정책을 펼칠 전망
- 바이든 대통령 재집권 시, 동맹 중시 및 소다자 협의체 통한 협력 기조 지속 및 강화
 - 중국과는 '디커플링'(decoupling) 아닌 '디리스크잉'(de-risking)을 통한 미중 긴장 완화 및 세계 공동과제 해결을 위한 중국과의 경쟁 관리 필요성 대두³³⁾
 - 한미 동맹과 한미일 3각 공조, 호주·영국과의 오키우스(AUKUS), 일본·호주·인도와의 쿼드(QUAD) 등 동맹관계를 강화하면서 베트남·필리핀 등과도 협력을 심화하여 중국의 역내 활동 억제 및 견제
- 트럼프 前대통령 집권 시, 미국의 이익에만 초점 맞추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재현
 - NATO, 한국, 일본 등 동맹국과의 관계 악화,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 대만 안전 보장 문제 등 불확실성 확대
 - 집권 1기 때의 親이스라엘 정책과 對이란 강경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지원은 중단하거나 대폭 감축할 가능성
 - 중국, 러시아, 북한이 트럼프의 재집권에 기대감을 표하는 등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성이 세계 경제와 국제정세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음

□ 한미 관계

- 바이든 대통령 재집권 시, 한미 관계는 '23.4월 양국 정상'의 '워싱턴 선언'을 기반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한미일 협력 체제는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예상

32) Andrea Shalal(2023.11.1.), "Arab American support for Biden, Democrats plummets over Israel, poll shows", Reuters.

33) Jake Sullivan(2023.10.24) "The Sources of American Power-A Foreign Policy for a Changed World" Foreign Affairs, November/December 2023.

- 트럼프 前대통령 집권 시, 방위비 분담 압박과 주둔군 재배치 등 부담을 지우며 양국간 현안의 해법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

□ 경제·산업 정책

- 양당 대통령 후보 모두 자국 우선주의 기조 아래 미국 제조업의 부활과 미국 중심의 첨단기술 공급망 재편을 위한 움직임을 한층 강화할 전망
- 인공지능(AI)·양자컴퓨팅·바이오·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에 대한 미국 내 투자를 확대하고, 핵심광물·반도체 등 주력 산업 분야의 공급망 공고화 노력을 지속할 예정
- 한편 트럼프 前 대통령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백지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폐기, 10% 기본관세 도입 및 고율관세 부과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어, 재집권시 더욱 공세적인 무역정책을 펼칠 우려가 있어 대비 필요




〈표6. 바이든 vs. 트럼프 - 주요 이슈 입장 비교〉

	바이든	트럼프
낙태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낙태 권리 강화 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화당의 낙태권 폐지 대비 신중한 입장
이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이틀 42’(불법입국자 즉시 추방) 폐지 등 포용적 이민정책 추진 ▪ 최근 남부 국경장벽 건설 재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력한 이민 억제 정책 ▪ 무슬림의 미국 여행금지, 외국 국적 부모를 둔 자녀의 출생시민권제 폐지
경제 및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든노믹스 성과 강조 ▪ 반도체법 등 핵심기술 투자 확대 및 일자리 창출 ▪ IRA 등 친환경 산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든 행정부 정책 비판(인플레이션 완화 실패) ▪ 10% 보편적 기본관세 부과 ▪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백지화
대중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리스킹 ▪ 첨단기술 수출 통제 및 중국 의존도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커플링 ▪ 최혜국 대우 박탈, 필수품 수입 단계적 축소
대외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크라이나 지원 강조 ▪ 친이스라엘 입장에서 가자지구 분쟁 영향 최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전 추진 ▪ 대러 제재 및 우크라이나 지원 축소
동맹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우선주의 바탕으로 한 개입주의 ▪ 소다자 안보 협력체 강화(IPEF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립주의적 미국 우선주의 ▪ NATO, 한국·일본 등 동맹국과의 협정 약화
대북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건 없는 대화 ▪ 확장억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톱-다운식 방식 선호 ▪ 긴장 완화 중시

2. 대만

- '24.1.13. 실시되는 제16대 대만 정부총통 선거와 함께 제11대 대만 입법위원 선거도 치러질 예정
 - '16년 선출되어 재선에 성공한 민주진보당 차이잉원 총통은 3선 제한 규정으로 출마가 불가함에 따라, 차기 총통은 새로운 인사가 선출될 예정
 - 양안관계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안보 지형과 향후 미중 패권 경쟁에도 영향을 미칠 선거
- 2010년대 중반 이후 총통 선거와 입법위원 선거 등 전국 단위 선거에서는 민주진보당(민진당)이 선전하고, 지방선거나 국민투표에서는 중국국민당(국민당)이 선전하는 구도

<표7. 제16대 대만 총통 후보>

사 진	소속당/ 후보명	주요 경력	당의 노선 / 후보 특이사항
	민주진보당 라이칭더 (賴清德, 64세)	('10~'17) 타이난시장 ('17~'19) 행정원장 ('20~現) 부총통	- 대만 민족주의, 자립주의와 자유주의, 진보주의 지향 - 중국으로부터의 주권 수호 메시지는 명확하게 내고 있으나 강경한 대만 독립 추구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 독립 대신 현상유지 메시지에 중점
	중국국민당 허우유이 (侯友宜, 66세)	('06~'08) 내정부 경정서장 ('08~'10) 중앙경찰대 교장 ('10~'18) 신베이부시장 ('18~現) 신베이시장	- 보수주의, 중화 민족주의의 추구 - 일국양제를 통한 양안통일과 대만 독립에 모두 반대 의사 표명, 92공식 ³⁴⁾ 찬성 - 군 복무기간 4개월로 단축 공약
	대만민중당 커원저 (柯文哲, 64세)	('14~'22) 타이베이시장	- 대만인들의 전체 이익 우선시, 민주주의, 법치, 자유, 인권, 지속가능한 개발 추구 - 양안관계에서 양대정당 사이의 중도 입장으로, 미-중 간 균형외교 노선 주장 - 중화문명에 경도된 유권자들에게 호소하며 민진당과의 차별성 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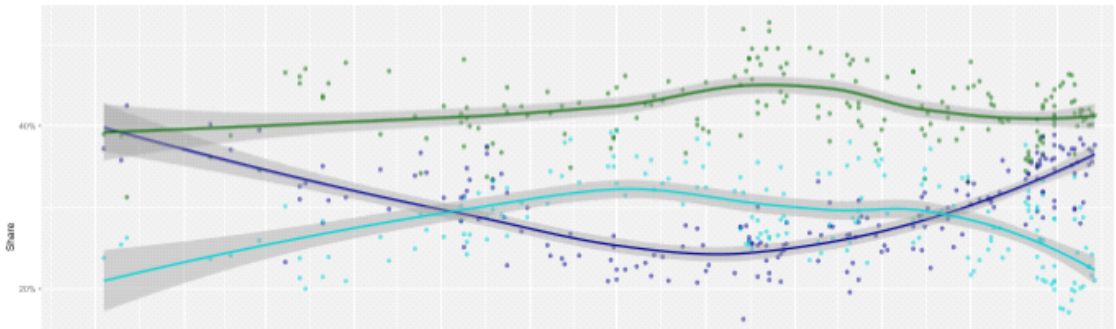
- 민진당은 그간 양안관계에서 암묵적 룰이었던 현상유지 기초에서 벗어나 언론을 통해 독립 여론을 조성하는 등 반중심리만을 자극하고 민생은 뒷전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
 - 코로나 팬데믹 시기 반도체 수요가 급증해 경제는 성장하였으나 분배가 잘 되지 않아 일반 대중은 경제성장을 잘 체감하지 못하며, 오히려 물가상승으로 불만이 고조된 상황³⁵⁾

34) '92년 정립된 중화인민공화국(중국)과 중화민국(대만) 양측 사이의 양안관계 원칙으로, 일중각표(一中各表), 즉,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되(一個中國), 그 표현은 양안 각자의 편의대로 한다(各自表述)”가 핵심.

35) Nick Meeker(2023.9.11.), “Taiwan’s Democracy in Action Ahead of the 2024 Elections”, Asia Program, Wilson Center.

- 민진당은 '22년 지방선거 참패에도 불구하고 지지세가 여전하며, 후보로 선출된 라이칭더는 강경파임에도 불구하고 차이잉원 총통에 비해 노년층과 비장년층, 중도층에서 경쟁력이 있는 편
 - 지난 6월 연이은 성추행 사건³⁶⁾ 이후 지지율이 떨어지고 부정적인 평가도 늘어나 부담으로 작용
- '18년 지방선거 압승 이후 2년 뒤 치러진 총통선거에서 압도적 패배 경험이 있는 **국민당** 지도부는 신중하게 준비하는 분위기
- 민진당의 지지세가 상당한 가운데, 과거 국민당 시절에도 경제가 좋지 않았고 중국의 위협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민진당에 비해 친중 성향 이미지가 강해 불리한 여건³⁷⁾
 - 허우유이 후보는 '22년 지방선거에서도 신베이 시장 재선에 무난히 성공하면서 안정감을 보여주었으나, 신베이 시장 재임 시절 유치원 마약 논란³⁸⁾과 국민당 내부 분열문제를 수습하지 못하면서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았음
- **민중당**은 국민당과의 후보 단일화가 무산된 가운데, 커원저 당 주석을 대선 후보로 선출
- 국민당 허우유이 후보의 논란으로 인해 이탈한 지지층을 흡수하여 허우유이 후보를 한때 역전하였으나, 총통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민진당 대 국민당의 전통적인 양자 대결 구도 강화 추세

<그림6. 제16대 대만 총통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23.12.16. 기준)>



주 : 녹색선이 민진당(라이칭더), 청색선이 국민당(허우유이), 하늘색 선이 민중당(커원저).

출처 : Ythlev (2023.12.16.), "Graph of opinion pollings for the 2024 Taiwanese presidential election", *Wikimedia Commons*.

□ 제16대 대만 총통선거의 주요 변수로는 중국의 선거 개입 가능성 등

- 대만 정부는 중국이 통신 앱이나 단체여행 등을 통해 중국 친화적인 후보자들에게 불법적으로

36) 정재용(2023.6.27.), "'성희롱 파문' 대만 민진당, 3천800만원 벌금", 연합뉴스.

37) Nick Meeker(2023.9.11.)

38) 허우유이 시장 재임 중인 '23.6월초 신베이시 공립유치원에서 아이들에게 마약인 페노바르비탈과 벤조디아제핀을 먹인 사실이 발각되어 논란이 일고, 허우유이 유권자들이 등을 돌려 상대후보인 라이칭더와 커원저로 선회 지지하면서 한때 지지율 감소.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총통 선거에 개입하려 할 것이라고 경고³⁹⁾

- 대만 검찰은 대만에 대한 중대한 가짜뉴스의 근원지가 모두 홍콩이라면서 그 배후에 선거 개입을 기도하는 중국이 있다고 강조⁴⁰⁾
- 중국에 진출한 ‘친중 성향’의 대만 기업인들이 대규모로 귀성 투표하려는 움직임에 주목한다는 분석도 제기⁴¹⁾

39) Yimou Lee(2023.6.21.), “Exclusive: Taiwan on alert for Chinese-funded election interference”. Reuters.

40) 연합뉴스(2023.10.9.), “대만 검찰, ‘홍콩, 대만 ‘가짜뉴스’ 공격의 근거지...배후는 중국”, 연합뉴스.

41) 박종국(2023.11.3.), “中진출 대만기업인 ‘귀향 투표’ 움직임에 대만 당국 ‘축각’...왜?”, 연합뉴스.

3. E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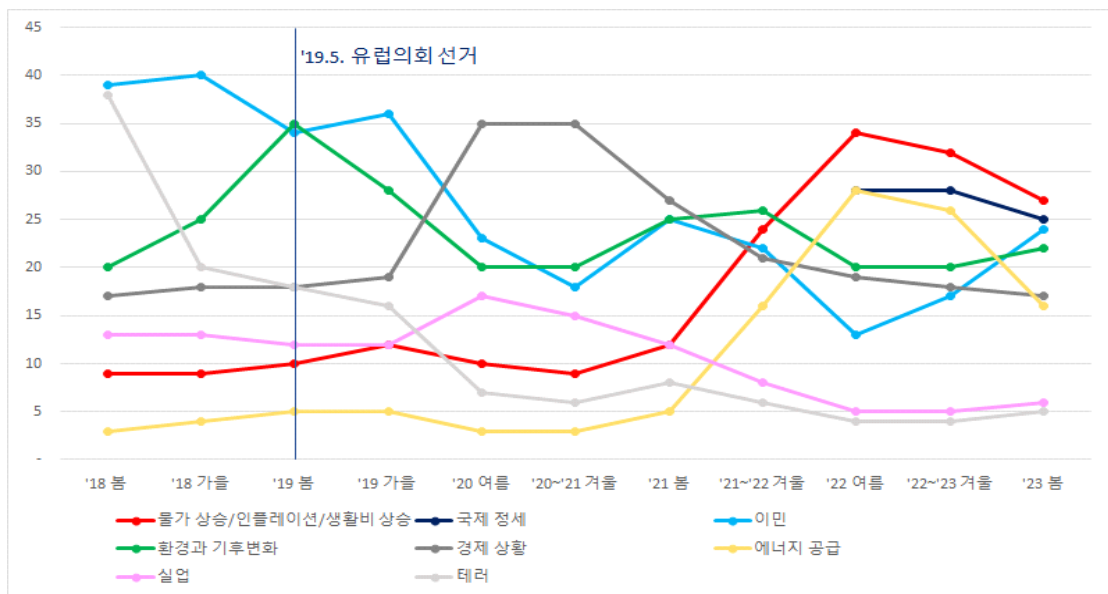
□ '24.6.6~9일 치러질 유럽연합(EU) 선거에서는 인플레이션 대응과 탈탄소화 정책이 핵심 사안으로 다뤄질 전망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가격 급등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확장적 재정정책은 유로존에 가파른 인플레이션을 초래했고, '22년 여름 이후 설문조사에서 '물가상승/인플레이션/생활비 상승'이 줄곧 가장 중요한 이슈로 인식됨.

- '환경과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은 지난 2019년 선거 대비 다소 감소하였으나, EU 시민들은 EU가 풍력 및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에 대규모로 투자해야하며(85%), 석유·가스 수입을 줄이고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것이 안보에 중요하다고 인식(81%)하는 등 여전히 환경과 에너지 전환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지지가 높음⁴²⁾

<그림7. EU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이슈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⁴³⁾>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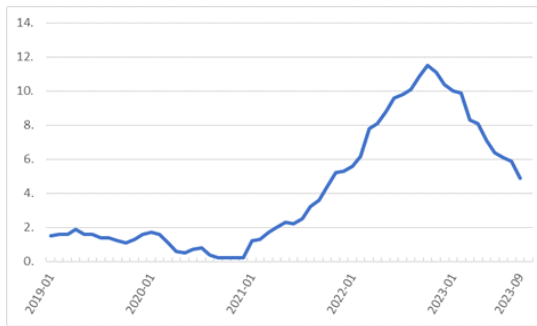
자료: EU, Eubarometer

42) European Union(2023), "Standard Eurobarometer 99 - Spring 2023" - QE3.

43) European Union(2023), "Standard Eurobarometer 99 - Spring 2023" - QA5, 15세 이상 EU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최대 두 항목에 대하여 중복응답이 가능하므로 백분율의 합계가 100%를 초과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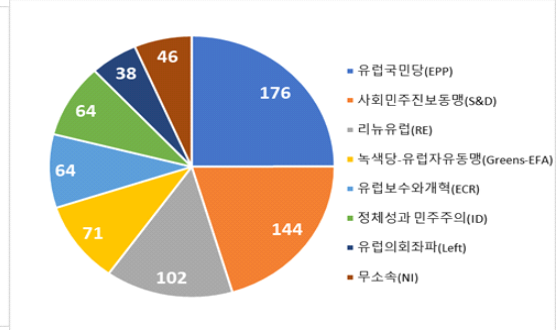
- '19년 선거에서는 녹색당계열(Greens·EFA)의 진출이 두드러지고 기존 메이저 좌·우파 정당은 약세를 보였으나, 다가오는 선거에서는 기후문제 외에 인플레이션 등 경제 현안에 대응할 수 있는 정당이 약진할 것으로 예상
- '19년 선거 당시 기후 문제와 녹색 경제의 대두로 녹색당계열은 총 751석 중 69석을 차지하며 직전 선거 대비 17석을 더 확보했고, 중도우파의 유럽국민당(EPP)과 중도좌파 유럽사회민주당(S&D)은 직전 선거 대비 69석이 줄어든 332석을 얻어 양대 정당 의석 수 합계가 처음으로 과반수에 미달
- '24년 선거에서도 녹색당 계열이 확보할 의석수에 관심이 쏠리고 있으나, 현지 언론에 따르면 시민들은 인플레이션 등 경제 이슈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외부요인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가자 분쟁, 그린 전환, EU 예산에 영향을 주는 경제적 요인(원조, 이민, 부채 등) 등이 있으며 특히 비용 부담 문제를 두고 회원국간 긴장이 조성될 가능성⁴⁴⁾
- 독일 출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은 내년 선거에 지역 후보자로 출마하지 않으나, 소속당인 유럽국민당(EPP)의 유력한 집행위원장 후보로서 연임을 노리는 것으로 알려짐⁴⁵⁾
-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23.9월 연례 유럽의회 정책연설에서 그간 집중해온 녹색 전환정책이 아닌 친기업 공약을 강조하며 중도우파의 지지를 얻고자 하는 등 본격적으로 선거 캠페인에 나섰다'는 평가⁴⁶⁾

그림8. EU 인플레이션율 (단위: %)



자료: Eurostat, European Parliament

그림9. 유럽 의회 구성 (2023.2.16.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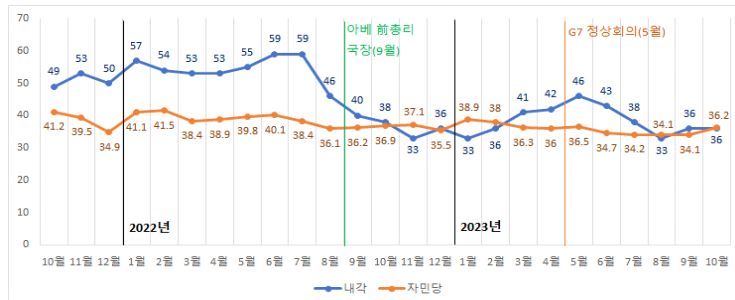
- 44) Leo von Breithen Thurn(2023.12.11.), "European Elections: A Game-changer in 2024?", Geopolitical Monitor.
- 45) Hans Von Der Burchard and Nicholas Vinocur(2023.9.14.), "Von der Leyen won't stand as MEP candidate in shot at second term", Politico.
- 46) Laura Dubois, *et al.*,(2023.9.13.), "Ursula von der Leyen lays out pro-business pitch ahead of EU elections", Financial Times.

4. 일본

- 기사다 총리는 '24.9월로 만료되는 임기를 연장하기 위해 중의원 해산 후 총선거를 다시 치러야 하나, 계속되는 지지율 하락으로 임기 연장 여부는 불투명
- 올해 기사다 내각 지지율은 한·일 정상회담('23.3월, 5월)과 히로시마 G7 정상회의('23.5.19.~21.) 등 외교 성과로 최고 46%('23.5월)까지 올랐으나, 물가 상승과 일본판 주민등록증인 '마이넘버 카드' 도입 혼란 등의 영향으로 하락을 거듭하며 10월 기준 지지율은 36%에 그침
- 기사다 총리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가진 중의원 보궐선거('23.10월)에서도 보수 강세 지역구 두 곳에서 1승 1패의 성적을 거두며 고전함에 따라 연내 중의원 해산이 어렵다는 내부 평가⁴⁷⁾
- 총리에 대한 지지율인 '총리 프리미엄'⁴⁸⁾이 거의 없는 현 상황에서 자민당 내부의 내각 교체 여론이 높아지면 교체될 가능성도 존재
- 기사다 내각 지지율은 외교성과가 나타난 올해 3~7월을 제외하면 아베 前총리의 국장('22.9월) 이후로 줄곧 제1여당인 자유민주당("자민당")의 지지율보다 낮거나 비슷
- 제2차 아베 내각의 경우 퇴임 전 내각 지지율은 38%(자민당 지지율 36%)을 기록하였고, 스가 내각의 경우 취임 1년도 되지 않아 지지율이 38%(자민당 지지율 47%)까지 하락하여 퇴진하는 등 총리 프리미엄이 거의 없거나 마이너스가 된 내각은 교체됨⁴⁹⁾

<그림10. 최근 2개년 기사다 내각 및 자민당 지지율 변화>

(단위: %)



자료: NHK

47) 요미우리신문(2023.10.23.), “衆參2補選 政権への警鐘と受け止めよ”, 요미우리신문.

48) 일본에서는 내각 지지율에서 여당 지지율을 뺀 값을 '총리 프리미엄'으로 보는데, 이 숫자가 크면 여당은 총리 인기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평가됨.

49) 최은미(2022.11.3.), “기사다 총리 취임 1년, 흔들리는 리더십: 향후 일본정차와 한일 관계”, 아산정책연구원

5. 기타

- (러·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상 임기가 2024년 초 나란히 만료되는 가운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대선 출마·당선이 유력한 반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대선을 미룰 것으로 전망
-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24.3월 예정된 대선 출마가 확실시되며⁵⁰⁾ 올해 기준 80% 내외의 안정적인 국정 지지율⁵¹⁾을 바탕으로 무난하게 재선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
 - 차기 대통령 임기는 2030년까지이며, 푸틴 대통령은 임기 중 헌법 개정 등을 통해 최대 2036년까지 대통령직 역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해둔 바 있음. '00.5월 대통령에 취임한 푸틴 대통령은 4년간의 실세 총리 재직 기간(2008~2012년)을 제외하더라도 현재까지 19년간 집권
- (우크라이나) '22.2월 러시아의 침공 이후 발령된 계엄령에 의해 헌법상 선거가 금지됨에 따라 당초 '24.3월로 예정된 대선이 치러질지는 미지수
 - 연임을 희망하는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민주주의 국가임을 증명하기 위해 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서방의 요구에 대해 난색을 표하면서, 선거를 치르는데 50억 흐리우냐(약 1,800억 원)에 달하는 서방의 재정적 지원을 요구⁵²⁾
- (멕시코) '24.6월 치러질 대선에서 좌파 집권당인 국가재건운동(MOREN)당 후보 클라우디아 셰인바움의 당선이 유력
 - 멕시코 대통령은 6년 단임제이므로 60%대의 높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현직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재선이 불가하며, 같은 당 소속 대선후보인 셰인바움 지지를 공식 표명⁵³⁾
 - 셰인바움 후보는 에너지공학 전공한 기후학자로서 '18.12월~'23.6월까지 멕시코시티 시장을 역임하는 동안 전기버스 도입을 추진하고 세계 최대 규모의 도매시장으로 알려진 수도 중앙시장 지붕에 태양광 발전 패널을 설치하는 등 친환경 정책을 집행⁵⁴⁾

50) Guy Faulconbridge(2023.11.7.), "Exclusive: Russia's Putin to stay in power past 2024, sources say", Reuters.

51) 레바다센터(Levada-Center)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중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수상 활동에 대해 전반적으로 찬성하는가 혹은 반대하는가?'에 대한 응답.

52) Veronika Melkozerova(2023.11.6.), "Ukraine's democratic dilemma: When to hold elections", Politico.

53) Carolina Gonzalez(2023.9.7.), "Mexico's AMLO Supports Sheinbaum as Morena Presidential Pick", Bloomberg.

54) Eliza Galeana(2023.1.23.), "Central Market's Solar Plant Will Be Completed in 2023", Mexico Business News.

- 멕시코는 세계 11대 산유국이자 G20 국가 중 유일하게 탄소중립 목표가 설정되지 않은 국가로서⁵⁵⁾,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의 뒤를 따르는 세인바움의 화석연료 중심의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기후와 청정 에너지를 우선하는 정책을 제시할지에 국내외 관심이 쏠림
- (중남미) 미국의 견제 속 중남미 지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가운데, 베네수엘라, 우루과이, 엘살바도르, 도미니카공화국, 파나마 등에서 대통령 선거가 실시될 예정
- '23.5월 치러진 파라과이 대선에서 미국은 선거 기간 중 파라과이측 관계자를 만나 다양한 지원 의사를 밝히는 등 관계개선 노력을 이어간 가운데, '24년 중남미 선거에서 미국의 영향력 행사에 주목
- '24년 대선을 앞둔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등 중남미 국가들은 대체로 중국과는 우호적인 경제·외교 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미국과의 관계는 국가별로 편차가 크며, 미·중 패권경쟁 구도 속 실리를 확보하는 선택을 할 것으로 전망⁵⁶⁾

55) 2022년 11월 업데이트된 멕시코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서 2026년 최대배출량 목표가 삭제되었으며 탄소 중립 및 기타 장기 목표가 미제시됨. 유럽계 기후 정책 평가 기관인 기후행동추적(Climate Action Tracker, CAT)은 멕시코의 환경 정책에 대해 등급 중 최하위 수준인 '매우 불충분하다'는 평가를 내림. (2022.12.12. 기준, <https://climateactiontracker.org/>)

56) John Polga-Hecimovich(2022.11.22.), "China's evolving economic footprint in Latin America", GIS.

3 공급망 재편의 확대

과거 냉전시대에 미국과 서유럽은 소련과 동구권 국가와 분리된 경제체제를 유지했고 결국 승리했다. 디커플링은 더 이상 상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이는 구냉전체제의 진영간 경제관계를 설명하는 용어로는 적합하나, 동일한 국제경제 시스템이 작동하는 현 상태에서의 미-중간 경제관계를 설명하기에는 부적절하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232조, 301조 등의 관세조치와 미중 무역합의를 통해 대중 무역적자를 해소하고자 했으나, 오히려 양국간 무역과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더 커졌다. 일견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관계는 무역 측면만 놓고 본다면 디커플링과는 전혀 맞지 않는 행보였다고 평가될 수도 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전면적인 거래금지나 수출통제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언급한 ‘좁은 마당의 높은 울타리가 적용되는 분야는 안보와 관련된 첨단기술 분야를 의미하며, 폰데라이언 EU집행위원장이 표현한 ‘디리싱킹’과는 다소 맥락이 다르나 ‘디커플링’이 아니라는 측면에서는 유사한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미국도 디리싱킹을 할 뿐이라고 했지만, 미중간 경제관계는 디커플링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산 첨단 ICT 제품의 대미 수출이 크게 감소하였고, 미국의 수출통제로 중국과 밸류체인을 형성한 한국, 일본, 유럽 등의 대중국 무역이 감소하고 있다. 여전히 중국에 투자하는 미국 기업이 있지만, 그보다는 중국을 빠져나오는 기업이 더 많아 이를 차감한 투자증분은 마이너스가 되었다. 인공지능, 디지털, 친환경 등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과 유럽의 노력은 그 분야가 확대되고 더욱 정교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러한 일방적 조치를 조정할 국제체제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새로운 합의가 도출될 때까지 진영간 갈등과 그에 따른 혼란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 복잡해지고 있는 공급망 리스크는 끝나지 않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이제 본격화되어 그 끝에는 새로운 합의와 체제일지도 모른다. 뉴욕 양키즈 명포수 요기 베라의 말처럼 공급망 재편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it ain't over till it's over.)’

1. 디커플링 or 디리싱킹? 미-중 전략경쟁 심화와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

- 미국은 첨단기술에 대한 대중국 제재를 강화하고 동맹국과의 프렌드쇼어링을 확대해 중국의 핵심광물·친환경 공급망 독점을 저지
 - (디리싱킹) EU가 중국과의 경제관계 단절은 불가능하나 과도한 의존에 따른 리스크는 축소하는 ‘디리싱킹’ 전략을 제시(‘23.3월)하자, 미국도 중국과 디커플링하고자 할 의도가 없다고 밝히며 ‘좁은 마당, 높은 울타리’ 원칙을 밝힘
 - (대중국 기술봉쇄) 국가안보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AI·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기 위해 수출통제 강화 및 투자제한 도입

- (수출통제 강화) 화웨이의 7나노 AP칩 자체 개발 성공으로 반도체 수출통제의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되자 미국은 ① ‘성능밀도’(performance density) 기준을 새로 도입해 저사양 반도체를 통해 동등한 성능을 내는 편법을 차단하고 ② 노광·식각·증착 등 반도체 장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며 ③ 국가안보 등의 사유에 따른 사전허가 요건이 적용되는 국가 범위를 확대(‘23.10.17.)

< 표8. 2023년 미국·EU의 대중국 제재 조치 및 중국 대응 경과 >

미국	EU	중국
2월 ▶ 자국 공무원 틱톡 사용 금지	1월 ▶ 네덜란드, 반도체 수출통제 동참 합의 ▶ 역외보조금 규제 발표(7.1. 시행)	
3월 ▶ 반도체과학법 가드레일 초안 발표 보조금 수혜기업 중국 등 우려대상국 내 생산능력 확대 5% 이내로 제한	3월 ▶ 핵심원자재법·탄소중립산업법 발의 핵심광물·친환경 대중 의존 축소 목적	4월 ▶ 반간첩법 개정안 통과(7.1. 시행) 5월 ▶ 주요시설의 美마이크론社 제품 구매금지
8월 ▶ 대중국 투자제한 행정명령 발표 AI·반도체·양자컴퓨팅 분야 적용	6월 ▶ EU경제안보전략 발표 AI·반도체·양자기술 제3국 투자제한 및 이중용도 제품 수출통제 등 포함	7월 ▶ 반도체 핵심광물 갈륨·게르마늄 수출통제 발표(8.1. 시행)
10월 ▶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규정 발표 저사양 AI반도체 제재 확대 및 우회 차단	7월 ▶ 네덜란드, 반도체 수출통제 발표(9.1. 시행) 9월 ▶ 중국산 전기차 반보조금 조사 착수 ▶ 네덜란드 반도체 수출통제 시행	10월 ▶ 전기차배터리 핵심광물 흑연 수출통제 발표(12.1. 시행)
12월 ▶ IRA FEOC 해석 관련 지침 발표 FEOC 기준 25% 및 기술 라이선스 규제	10월 ▶ ‘경제강압 대응 조치법’ 채택 11월 ▶ 핵심원자재법 합의안 타결 ▶ 산화티타늄 등 반덤핑 조사 개시	11월 ▶ 희토류 수출 보고 의무화(‘23.10.31.~’25.10.31.)

- (대중국 공급망 의존도 분산) 반도체과학법·인플레이션감축법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의 혜택을 중국이 보지 않도록 제한하며, IPEF 필러2~4 협상 타결, 베트남·인도네시아와의 외교관계 격상, G7 공급망 강화 파트너십 및 인도-중동-유럽 경제회랑(IMEC) 출범 등 동맹국과의 ‘프렌드쇼어링’ 확대
 - 인플레이션감축법·반도체과학법의 지나친 ‘자국 우선주의’로 동맹국과 마찰을 빚자 미국은 친환경차 시행지침(‘23.3월)에 동맹국의 입장을 반영하고 한국 반도체 기업을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로 지정하는 등 ‘동맹국 달래기’에 나서며 공조를 이끌어 냄
 - (IRA FEOC 해석지침) 배터리 소재·부품의 높은 대중국 의존도에도 불구하고 해외우려기관(FEOC) 판단기준을 반도체과학법과 동일한 25%로 설정⁵⁷⁾하고 기술제휴(licensing)를 통한 실효적 통제도

57) 중국 등 해외우려국 정부가 이사회 의석, 의결권, 지분의 25%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경우 해외우려국 정부로부터 ‘소유·통제·지시’를 받는 것으로 해석하여 해외우려기관(FEOC)로 간주.

FEOC로 간주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배터리 공급망 내 중국 배제 강도를 높임

- EU, 일본, 호주 등 美 동맹국들은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 재편에 동참하고 있으나, '중국과의 첨단기술 전략경쟁'보다는 과도한 대중국 무역 의존도 축소 및 자국 산업 육성에 초점
 - (EU) 역내 친환경·핵심광물 제조역량 확대 및 대중국 의존도 축소를 위해 핵심원자재법(CRMA), 탄소중립산업법(NZIA) 입법에 나서고 중국산 저가 전기차에 대해 반보조금 조사를 직권으로 추진하는 등 중국산 핵심광물·전기차·재생에너지의 EU 시장 잠식에 강경하게 대응
 - (일본) 미국과 연구개발조직을 공동 설립해 10년간 1조 엔을 투입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반도체 기업 설비·장비·부품 투자의 최대 1/3, 소재 최대 50% 수준의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⁵⁸⁾해 한국·대만에 편중된 반도체 제조 공급망의 일본 분산 유도
 - (호주) 중국의 핵심광물 독점에 대항해 미국 등과 자원 동맹을 강화하며, 20억 호주달러를 투입해 핵심광물 채굴 및 가공 시설 용량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
- 중국은 기술자립 및 반서구 연대 강화를 통해 제재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상쇄하며 보복조치를 본격화
 - (산업 고도화·국산화 및 국제협력) 반도체와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율을 높이고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 고부가가치 제조업을 지속 육성하며 일대일로 연선 국가와의 공급망 협력 및 반서구 연대를 강화
 - (수출통제 보복) 사이버보안법(网络安全法)에 근거해 국내 핵심정보인프라 운영자들의 美마이크론사의 제품 구매를 금지하고, 핵심광물 생산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갈륨·게르마늄 및 흑연에 대한 수출통제
 - (희토류 관련 기술 수출 규제 강화) 핵심광물 수출통제에 이어 「중국수출 금지·제한 기술목록」⁵⁹⁾ 개정을 통해 희토류 추출·분리 등 핵심 제련·가공 기술 수출에 대한 규제 범위를 확대하고 영구자석 제조 기술 수출을 금지('23.12.21.)⁶⁰⁾
 - 중국의 희토류 가공 및 정제 산업 점유율은 약 90%에 달해⁶¹⁾ 관련 기술의 수출금지·통제목록 등재를 근거로 생산장비 수출 및 전문인력의 이동을 차단할 경우 미국·EU 등 다른 국가의 희토류 공급망 내재화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음⁶²⁾

58) Ko Fujioka(2023.2.7.), "Japan to subsidize domestic chipmaking beyond the cutting edge", Nikkei Asia.

59) 「중국수출 금지·제한 기술목록」은 중국 대외무역법 및 기술수출입관리조례에 근거하여 수출 금지·제한 기술의 목록과 세부 통제항목 등을 명시한 규정으로, '기술 수출'은 무역, 투자 또는 경제기술 협력의 방식으로 중국 영토에서 외국으로 기술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

60) 商务部(2023.12.21.), "中国禁止出口限制出口技术目录".

61) IEA(2022), "The Role of Critical Minerals in Clean Energy Transitions", IEA.

62) 박가현(2023), "「중국 수출 금지·제한 기술목록 개정안」의 희토류 기술 규제와 시사점". KITA 트레이드 브리프 제 10호, 한국무역협회.

< 표9. 2023년 「중국수출 금지·제한 기술목록」 中 희토류 관련 개정 내용 >

분류	기존 (2020년)	개정안 ('23.12.21. 발표)
수출금지 기술목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업공학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온형 희토류 광산 침출 공법 ▲ 비철금속야금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온 흡착형 희토류더미 침출기술 및 공식 ▲ 희토의 제련, 가공, 이용기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체 희토류 내 희토 원소의 연속 분리, "다중 추출" 프로세스와 매개변수 2. 희토류 추출제의 합성 공법 3. 단일 희토(순도≥99%) 추출 공법 4. 금속재료의 희토 첨가 기술 5. 희토류 합금 소재 및 그 제품의 생산 기술 6. 이온 희토류 광부의 희토류 원소 추출 공법 및 매개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토의 제련, 가공, 이용기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희토 추출 분리 공법 2. 희토류 금속 및 합금소재 생산 기술 3. SmCo, NdFeB 및 세륨 자석 제조 기술 4. 희토류 봉산산소칼슘 제조 기술
수출제한 기술목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업공학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온형 희토류 광산 침출공정 ▲비철금속 야금기술 <ol style="list-style-type: none"> 6. 희토류 채굴, 선광 및 제련 기술(수출금지품목 지정 기술 제외) 7. 희토류 추출제의 합성 공정 및 배합 8. 금속재료의 희토류 개질 및 첨가 기술

자료: 박가현(2023), 중국 상무부(2023)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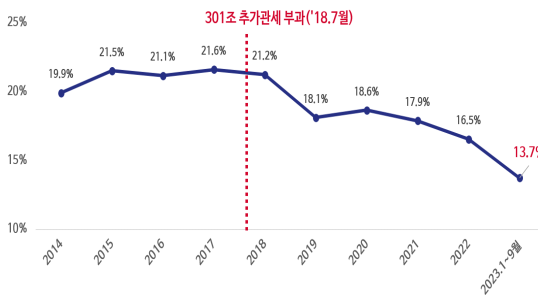
< 표10. 서방의 제재에 맞선 중국의 공급망 강화 정책과 보복조치 >

미국 및 동맹국	중국 주요 정책 및 보복 조치
반도체 수출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덜란드 수출통제 공식화('23.6.30.) → (中)갈륨·게르마늄 수출통제 조치 발표('23.7.4.) - 미국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조치 발표('23.10.17.) → (中)흑연 수출통제 발표('23.10.20.)
반도체 국산화율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도체 장비·소재 국산화 지원 위해 3,000억 위안 규모의 3기 빅펀드(반도체산업투자기금) 조성 추진 중 - '23.1~9월 첨단 제조업 투자 전년동기비 11.3% 증가⁶³⁾
vs	
핵심광물·친환경 공급망 독점 견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년까지 전세계 신설 설비 중 중국 비중 배터리(70%), 양극재(98%), 음극재(93%) 코발트(95%), 리튬(60%), 니켈(60%)⁶⁴⁾ - 일대일로 정상 포럼에서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10여개국과 핵심광물협정 체결('23.10월)
일대일로 대항 인프라투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조변경) 대규모 인프라 투자 → '작지만 아름다운(小而美)' - (친환경 투자) 배터리 제조 및 핵심광물 투자 확대
G7 동맹 강화	BRICS 세력 확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란 등 6개 신규 회원국 추가

(1) 디리스팅? 사실상 디커플링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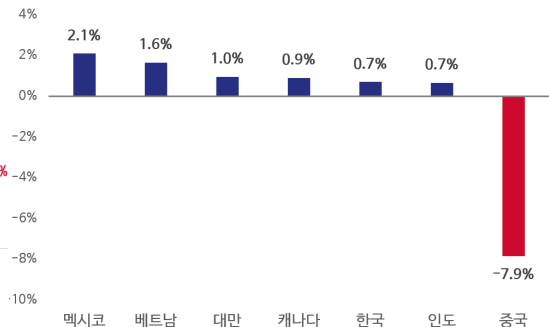
- 미국은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추구하지 않음’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과 달리 미국의 대중국 수입 의존도는 급감하고 있으며, 대중국 외국인직접투자(FDI)도 하락세
- (美 대중국 수입 감소) 미국의 총수입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3.1~8월 13.7%로, 미-중 무역갈등이 본격화되기 전인 ’17년 21.6% 대비 7.9%p 감소했으며, ’22년 16.5% 대비 2.8%p 급감
 - 특히 미국 정부가 첨단기술제품(Advanced Technology Products)로 분류하는 품목의 대중국 수입 비중은 2017년 36.8%에서 2022년 23.1%로 13.7%p 감소⁶⁵⁾
 - 2023년 1~9월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는 2,012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34.9% 감소했으며, 이러한 추세가 연말까지 계속될 경우 2023년 총 대중 무역적자는 약 2,800억 달러를 기록해 2010년 2,730억 달러 이래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임⁶⁶⁾
- 중국의 하락분(-8.1%)을 멕시코(2.1%), 베트남(1.6%), 대만(1.0%), 캐나다(0.9%), 한국(0.7%), 인도(0.6%) 등이 대체

<그림11. 미국 대중국 수입 비중 변화 추이 >



자료 : USITC

<그림12. 미국 국가별 수입 비중 변화 (17~23.9.) >



자료 : USITC

- EU, 일본 등 美 동맹국의 대중 수입 의존도 또한 공급망 다변화의 영향으로 소폭 감소 추세

* EU의 대중국 수입 의존도(%) : 7.3('18) → 7.6('19) → 8.5('20) → 8.6('21) → **8.8('22)** → 7.9('23.1~8.)
 * 일본의 대중국 수입 의존도(%) : 23.2('18) → 23.5('19) → **25.8('20)** → 24.1('21) → 21.0('22) → 21.7('23.1~8.)

63) 国家统计局(2023.10.19.), “擎翟善清：固定资产投资规模持续扩大 制造业投资增速继续加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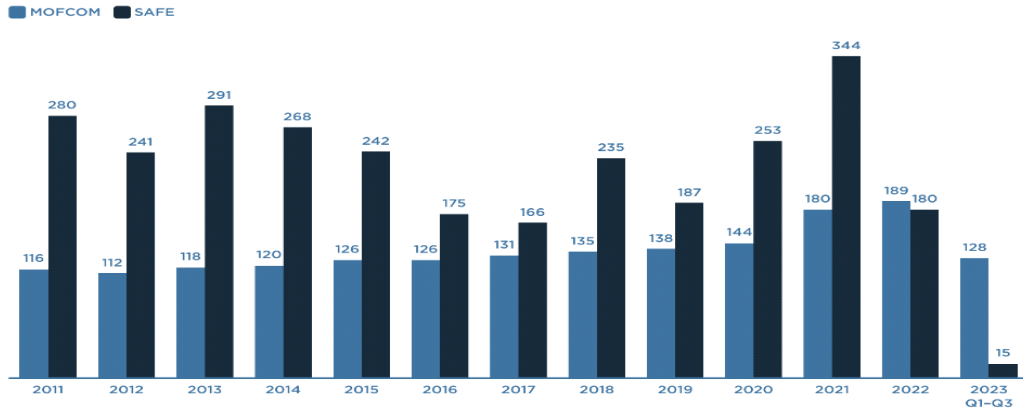
64) IEA(2022.7.), “Global Supply Chains of EV Batteries”, IEA.

65) Aiyar, S, A Presbitero and M Ruta (eds) (2023), “Geoeconomic Fragmentation: The Economic Risks from a Fractured World Economy”, CEPR Press, Paris & London.

66) Doug Palmer(2023.11.7.), “Report shows US trade deficit with China falling sharply in 2023”, Politico.

- (대중국 FDI 감소) '23.9월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외국인직접투자(FDI)는 728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비 34% 감소해 '14년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⁶⁷⁾

<그림13. 대중국 FDI 추이 >



자료 : PIIE(2023)

- '23년 1~3분기 중국 상무부(MOFCOM)가 발표한 총 FDI 유입액과 외환관리국(SAFE)이 발표한 FDI 순수입⁶⁸⁾ 간 1,130억 달러에 달하는 차이가 발생한 것은 외국인 투자자가 이익을 재투자하지 않고 환수함에 따라 직접투자 자산 순매도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⁶⁹⁾

□ **지정학적 리스크 외에도 반간첩법 시행 등 시장의 신뢰에 반하는 중국 당국의 통제조치와 경제 성장세 둔화, 로컬기업 약진으로 인한 중국의 판매시장으로서의 가치 하락이 영향을 미침**

- (규제환경) 중국 당국이 반간첩법에 근거해 외국기업의 신규투자 검토 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외국 컨설팅 및 실사기업에 대한 통제에 나서고, 데이터안전법에 따라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을 제한하는 등 규제환경이 엄격해지면서 중국시장 투자 축소 및 철수를 고려하는 기업이 늘어남
 - 주중 EU상공회의소는 개정된 반간첩법의 간첩행위 적용 범위 및 데이터안전법의 국경 간 데이터 이전 규제 범위가 지나치게 모호해 공급망 실사 등 통상적인 기업활동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주장⁷⁰⁾
 - 주중 EU상공회의소 설문에 따르면 회원사 중 11%는 현재 진행 중인 투자를 중국에서 다른 국가로 이미 이전했거나 이전을 결정했다고 밝혔으며, 20%는 이전을 검토 중이거나 대중 투자를 연기 중이라고 응답⁷¹⁾

67) Thomas Hale et al.,(2023.10.29.), "China suffers plunging foreign direct investment amid geopolitical tensions", Financial Times.

68) FDI 유입액에서 유출액을 뺀 금액.

69) Nicholas R. Lardy(2023.11.17.), "Foreign direct investment is exiting China, new data show", PIIE.

70) Joe Leahy(2023.11.12.), "Beijing's data and spy laws threaten to spur decoupling with Europe, says business group", Financial Times.

- (판매시장 가치 하락) 중국 경제의 성장세 둔화, 중국 로컬 업체들의 경쟁력 강화 및 애국소비(귀차오·國潮) 경향 확산에 따른 외국 상품의 입지 축소로 인해 판매시장으로서 가지는 가치 감소

(2)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과 한계

□ 중국에 집중된 공급망의 분산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인도를 맹주로 한 글로벌 사우스⁷²⁾가 부상

- (인도) 모디 정부는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자립 인디아(Self-reliant India)’ 정책 및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생산연계인센티브(Production Linked Incentive, PLI)⁷³⁾ 제도를 시행하고 미국 및 우방국과의 협력을 확대하며 글로벌 제조기업 투자를 적극 유치
 - ’22년 인도 내 그린필드 투자 발표 건수는 총 1,008건으로 미국(2,075건), 영국(1,230건)에 이어 세계 3위를 기록했으며⁷⁴⁾, 특히 미국·EU발 그린필드 투자가 투자액 기준 전년비 400% 증가⁷⁵⁾
 - 인도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최근 테슬라 기가팩토리를 유치하기 위해 수입 전기차에 적용되는 70~100% 수준의 고율 관세를 한시적으로 15%까지 인하하는 일몰 조항을 검토 중⁷⁶⁾이라고 밝힐 정도로 해외투자 유치에 대한 강력한 정책 의지를 드러냄
- (광물자원 부국) 글로벌 사우스에 속한 인도네시아, 칠레, 브라질, 콩고민주공화국, 모잠비크 등은 친환경 전환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이 풍부해 중국 외 공급선 다변화를 위한 대안적 투자처로 부상

71) European Union Chamber of Commerce in China(2023.6.21.), “Business Confidence Survey 2023”.

72)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는 북반구 저위도, 남반구에 위치한 아시아·중남미·아프리카 개발도상국과 신흥국을 가리키며, 선진국을 뜻하는 ‘글로벌 노스’와 대비되는 개념. 미·중 경쟁 심화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미국, EU 등 서방 국가들과 중국·러시아가 대립하는 가운데 글로벌 사우스는 제3극(極)으로서 양 진영 모두로부터 이익을 구하는 실리노선을 추구하는 동시에 서방을 압박해 국제 문제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반영하고자 함. 대표적으로 인도는 쿼드, IPEF의 일원임과 동시에 브릭스, 상하이협력기구(SCO)의 회원국이며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지 않음.

73) 전기전자, 자동차 및 부품 등 14개 전략산업에 대해 PLI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이 설비투자나 연구개발, 기술이전 등 약정한 투자와 매출 목표를 달성하면 5년에 걸쳐 매년 매출액 증가분의 4~6%에 달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2021/22 회계연도를 시작으로 5년간 총 1조 9,700억 루피(한화 약 30.5조원) 투자를 공언.

74) UNCTAD(2023), “World Investment Report 2023”.

75) Agatha Kratz, Camille Boullenois(2023.9.13.). “Irrational Expectations: Long-Term Challenges of Diversification Away from China,” Rhodium Group.

76) John Reed and Peter Campbell(2023.11.13.), “India considers slashing EV tariffs to lure Tesla”, Financial Times.

< 표11. 글로벌 사우스 주요국별 광물 채굴량 및 매장량 비중 >

광물	국가	채굴량		매장량		광물	국가	채굴량		매장량	
		순위	비중	순위	비중			순위	비중	순위	비중
니켈	인도네시아	1위	48%	1위	21%	흑연	모잠비크	2위	13%	4위	8%
	필리핀	2위	10%	6위	5%		마다가스카르	3위	8%	3위	8%
	브라질	5위	3%	3위	16%		브라질	4위	7%	1위	22%
리튬	칠레	2위	30%	1위	36%	코발트	DR콩고	1위	68%	1위	48%
	아르헨티나	4위	5%	3위	10%		인도네시아	2위	5%	3위	7%

자료 : USGS(2023)

- (한계) 다만 중국을 대체하는 글로벌 생산기지로 부상하고 있는 베트남, 인도 등 국가들은 여전히 원자재·부품 조달을 위한 자국 내 공급망 생태계가 구축되지 않아 대중국 무역 의존도가 높게 나타남
 - 중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 10개국 간 무역액은 '22.11월 기준 미국이 301조에 근거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18.7월 대비 71% 증가했으며, 동기간 중국-인도 무역액은 49% 성장⁷⁷⁾
 - 특히 베트남의 대중국 수입 비중은 '17년 29.9%에서 '22년 40.2%로 급증했으며, 주요 수입 품목은 반도체, 섬유, 무선통신기기 분야
 - 라구람 라잔 前 인도준비은행 총재 등은 인도의 생산연계인센티브가 실제 제조기업이 아닌 '조립' 기업에 제공되고 있고, 이로 인해 인도의 수입 부품 및 원자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⁷⁸⁾

77) Jason Douglas(2022.12.28.), "China Increases Trade in Asia as U.S. Pushes Toward Decoupling", Wall Street Journal.

78) Rahul Chauhan, et al.,(2023.5.29.), "Has India really become a mobile phone manufacturing giant?", The Wire.

(3) 2024년 전망 및 관전포인트

① 미국의 대중국 제재는 대선을 앞두고 더욱 촘촘하고 강경해질 것으로 전망

□ 바이든 정부는 선거 캠페인 기간 공화당 후보의 공세에 대응하고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 중국에 대한 통상 압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

○ 대선을 앞두고 미국 의회의 초당적인 반중 정서가 고조되고 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 및 전자제품·철강·의약품 등의 대중국 수입 단계적 중단 등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어 백악관의 대중국 강경책을 요구하는 정치적 압박이 심화되고 있음

— 바이든 정부는 고위급 인사들의 연이은 방중('23.6~8월) 및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23.11.15.)을 통해 중국과의 갈등 수준을 관리하면서도 국가안보를 위한 수출통제 등 제재조치는 계속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

○ (대중국 301조 관세) 바이든 행정부는 연내 301조 관세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현 조치 유지 혹은 인플레이션 경감을 위해 의류, 신발 등 소비재에 대한 관세는 인하하는 대신 자국산업 육성 차원에서 전기차 및 자동차 부품 등은 관세를 인상하는 재조정 가능성 등이 제기됨⁷⁹⁾

*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301조 조치의 4년 시한이 도래하자 USTR은 무역법 307조에 따라 조치의 유효성 및 자국 경제, 소비자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한 검토를 18개월간 진행 중

* 산업용 부품 352개 품목 및 코로나19 관련 77개 품목에 한해 올해 말까지 관세 면제 조치가 이어지고 있음

— 수혜기업 1곳이라도 301조 조치의 연장을 요청할 경우 동 조치는 종료되지 않음

— 하원 미·중 전략경쟁특위 의원들은 USTR에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무역법 301조를 발동해 현행 25% 관세 외에 징벌적 관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나('23.11.8.), 관세조치를 확대하는 경우 정상회담을 통해 안정화 궤도에 오른 미중 관계가 또 다시 악화될 위험이 있어 목록 3 및 4A의 소비재를 중심으로 관세 종료나 완화 조치를 병행할 가능성

○ (중국 견제 입법)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소기준 특혜 배제, 중국의 반덤핑 우회 및 초국경 보조금에 대한 규제 확대, 경제강압 조치에 대한 보복성 관세인상 권한 도입 등 중국 견제 법안은 美 의회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으며 내년에도 지속 추진될 전망

79) Inside US trade(2023.11.14.), "Auto industry fears China could use graphite controls to reverse EV 'friendshoring'", Inside US trade.

< 표12. 미국의 대중국 제재 주요 입법 추진 동향 >

발의처	법안명	주요 내용	진행상황
상·하원	Import Security and Fairness Act	중국 등 지식재산권 규정의 적용 및 집행이 느슨한 비시장경제 국가 상품을 무관세 혜택에서 배제	상·하원 심의 중
상원	De Minimis Reciprocity Act of 2023	국가별 수입 규모에 맞춰 미소기준(De Minimis)을 조정하여 무관세 수입량을 축소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미소기준 혜택 대상에서 제외	상원 심의 중
상·하원	Level the Playing Field 2.0 Act	- 기업이 생산지를 국외 이전 등의 방식으로 수입규제 조치 회피 시 美 상무부의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연속(Successive)' 조사 항목 신설 - 중국이 일대일로 참가 역외국에 소재한 자국기업에 제공하는 초국경 보조금에 대한 조사 절차 규정	상·하원 심의 중
하원	National Critical Capabilities Defense Act	반도체·AI 등 첨단기술 분야 대중국 투자 시 정부 승인 의무화	하원 심의 중
상·하원	Countering Economic Coercion Act of 2023	경제 강압 가해국에 대한 대통령의 관세인상 권한과 국무부의 신속 결정 권한 등을 추가	상·하원 심의 중
하원	American Worker and Trade Competitiveness Act	GSP(일반특혜관세제도) 재승인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파트너 국가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무역기회를 늘리고 대중국 의존도를 낮춤	하원 심의 중
상원	Ending China's Developing Nation Status Act	중국이 국제기구나 무역협상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누리는 것을 금지하고 이미 그런 지위를 누릴 경우 이를 박탈	상원 심의 중

자료 : 미 의회

□ **美 리더십 변화와 관계없이 강경한 대중국 견제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견제 수단에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

- 美 의회 양당이 대중 강경정책에 있어 초당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를 비판하면서도 통상법 301조에 의한 추가관세, 수출통제 등 대중국 견제 정책을 대부분 계승한 만큼 바이든-트럼프 양당 후보 간 대중국 견제 기조에는 큰 차이가 없음
- 다만 트럼프 前 대통령 집권 시 중국에 대한 PNTR 지위를 박탈함으로써 중국산 제품에 대해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인권·노동·환경 등 명분을 내세운 제재는 약화할 것으로 예상되어 대중국 견제 수단은 바이든 정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②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EU 주도의 공급망 재편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임**

- 미국은 AI·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수출통제, 투자제한 등 대중국 기술 봉쇄의 '빈틈'을 찾아 메우고 집행을 강화하며 동맹국에 대한 공조 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
- (반도체 수출통제) 미국 정부는 수출통제 우회용 반도체 출시나 중국 기업의 제3국 우회를 통한 반도체 및 장비 구매를 차단하기 위해 통제품목 범위, 수출제한 국가, 거래제한명단

(Entity List)를 지속 확대할 가능성이 있음

- 수출통제 강화 규정 발표('23.10.17.) 직후 엔비디아는 해당 규제를 우회하는 맞춤형 제품 개발에 착수해 중국시장용 반도체 3종(HGX H20, L20 PCIe, L2 PCIe)을 출시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인텔은 자사의 중국시장용 반도체인 Gaudi2의 개량버전을 출시할 계획⁸⁰⁾
- 니카흐타르 前 BIS 국장대행은 수출통제조치 강화에도 불구하고 중국 기업이 통제대상국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유럽 국가들에 있는 자회사를 우회로로 활용할 가능성을 제기⁸¹⁾

○ **(동맹국 공조 압박)** 미국은 일본, 네덜란드, 한국 등 동맹국의 수출통제 및 투자제한 조치 동참 필요성을 지속 제기하고 있음

- 미국이 단독으로 수출통제, 투자제한 조치를 시행할 경우 중국이 네덜란드, 일본을 통해 통제 대상 장비·반도체를 비축하거나 다른 나라에서 투자를 유치할 수 있어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짐
- 지나 러몬도 美 상무장관은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를 위한 한국 등 동맹국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냉전시대에 서방이 공산권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을 막기 위해 도입했던 '코콤(COCOM)'과 같은 다자주의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23.12.2.)⁸²⁾

○ **(EU 수출통제 추진)** EU집행위는 EU경제안보전략('23.6월) 하에서 중국 등 EU와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국가들이 반도체·AI·양자컴퓨팅·바이오 등 4대 첨단기술을 무기화할 위험성에 대한 평가를 연내 마치고 '24년 수출통제 등 필요한 조치에 나설 예정

□ **미국·EU는 보조금 혜택 배제, 무역구제, 강제노동 제재 등 조치를 확대해 중국산 전기차·배터리·태양광 제품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축소하고자 함**

○ **(보조금 혜택 배제)** 美 인플레이션감축법의 '해외우려기관'(FEOC) 해석 지침이 지분을 기준을 25%로 엄격하게 설정하고 기술제휴(licensing) 관련 제한을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美 대중 강경파는 중국 기업과 협력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으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어 의견수렴 이후 초안이 보다 엄격하게 수정될 가능성에도 대비할 필요

- 조 맨친 상원의원은 이미 중국 배터리 기업의 대(對)한국 투자 증가를 비판한 바 있으며, 의회심사법(Congressional Review Act)⁸³⁾을 통해 거부 결의를 추진해 규정을 뒤집을 것이라고 주장⁸⁴⁾

80) 21세기경제(2023.11.9.), “芯片战场 | 英伟达·英特尔均计划推出改良版AI芯片 英伟达产品或年底量产”.

81) Inside US trade(2023.11.22.), “Analysts: New export controls leave room for Chinese circumvention”, Inside US trade.

82) Ari Hawkins(2023.12.4.), “Raimondo chides Congress on China tech threat”, Politico.

83) 행정입법에 대해 상·하원이 합동으로 거부 결의 후 대통령의 재의 요구에도 양원이 재차 거부할 경우, 이를 사실상 폐지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의 통제 수단으로 기능.

84) James Bikales(2023.12.1.), “Biden’s latest China crackdown puts his EV ambitions at risk”, Politico.

- **(무역구제)** 미국은 동남아 4개국을 우회해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한 2년간의 상계관세 유예기간 종료 후('24.6.6.) 최대 254%에 달하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며, EU는 중국산 전기차에 이어 풍력터빈 및 철강 제품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도 검토하고 있음
 - **(강제노동 제재)** 바이든 행정부는 위구르강제노동금지법(UFLPA)에 따른 제재 대상을 배터리, 타이어, 알루미늄 등 전기차 부품으로 확대해 집행을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EU는 유럽의회 선거('24.6월) 전 '강제노동 결부 상품 수입 금지 규칙' 입법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
 - 美 UFLPA는 당초 집행 우선순위(high-priority) 품목으로 면화, 토마토, 폴리실리콘을 지정했으나, '23년 업데이트된 UFLPA 전략은 배터리, 타이어, 차량부품, 알루미늄·철강·구리 및 다운스트림 제품 등을 잠재적 위험 분야(potential risk areas)로 별도 지정⁸⁵⁾
 - EU의 경우 역내 태양광 업계가 중국 태양광 패널 제조사들의 덤핑 행위로 현물가격이 급락해 유럽 기업들이 줄도산 위기에 처했다며 EU집행위원회에 긴급 조치를 요구하고 있어⁸⁶⁾, EU는 강제노동 제재 법안에 근거해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EU 내 제조역량을 회복하고자 할 것
 - **(무역협상)** 美 바이든 행정부와 EU 집행위원회는 중국에 집중된 공급망의 다변화를 위해 각각 IPEF, 호주 및 메르코수르(MERCOSUR·남미공동시장)와의 FTA를 추진하고 있으나 엄격한 환경·노동 조항을 둔 의견차, 협상국 국내정치 이슈 등으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음
- 인도, 인도네시아 등 중국 대체지로 부상하고 있는 국가들은 공급망 재편 흐름에 편승해 자국으로 제조업·핵심광물 등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보호주의적 조치를 확대할 수 있음
- 인도 정부가 노트북, 개인용 컴퓨터 등에 대한 수입허가제 시행을 발표하고('23.8.3.) 이후 미국과 관련 업계의 반발에도 보다 완화된 조치인 수입등록제('23.11.1. 시행)를 강행한 것은 동 품목의 높은 대중국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자국 내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됨⁸⁷⁾
 - 인도네시아는 니켈('23.1월)에 이어 6월 보크사이트의 원광 수출을 금지했고, 말레이시아도 향후 희토류 수출금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23.9월), 필리핀도 니켈에 대한 수출관세 부과를 검토 중

85)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2023.7.26.), "2023 Updates to The Strategy To Prevent the Importation of Goods Mined, Produced, Or Manufactured With Forced Labor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86) SolarPowerEurope(2023.9.11.), "Record-low solar PV prices risk EU's open strategic autonomy".

87) 한송옥(2023.8.4.), "인도, 2023년 11월 1일부 컴퓨터 제품 수입 등록제도 시행," KOTRA.

③ 제재 강도가 높아질수록 중국은 자립자강에 속도 내고 반격 태세를 강화할 수 있음

- 중국은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는 한편 핵심광물 공급망을 대중국 제재 확대를 막기 위한 협상 도구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나, 내부 리스크 및 외자 유치 필요성으로 인해 강경한 대응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
 - (기술 자립) 中 화웨이의 7나노 AP칩 자체 개발 성공 사례와 같이 서구의 기술 봉쇄에도 불구하고 우회로를 통해 필요한 장비·부품을 조달하고 낮은 수율, 높은 원가 등 기술 혁신의 한계를 정부 자금으로 뒷받침하며 기술 자립 시도를 강화할 것으로 보임
 - (핵심광물 수출통제) 중국 상무부는 ‘벌크 제품 수출입 보고 통계조사 제도’ 개정안에 따라 2년간 희토류 73종에 대한 수출보고를 의무화하고(’23.10.31. 시행) 희토류 가공기술에 대한 수출규제를 확대해(’23.12.21.), 향후 수출통제를 희토류 및 영구자석까지 확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다만 수출통제를 시행할 경우에도 수출을 전면 차단하기보다는 변칙적으로 수출을 불허하는 등 중국 정부의 통제 수단으로 활용하며 미국의 추가적인 수출제재를 막기 위한 ‘협상 도구’로 활용할 가능성⁸⁸⁾
 - 8월 수출통제 시행 이후 2달 간 갈륨 수출량은 0kg, 게르마늄은 단 1kg 수준이었으며, 10월 갈륨 250kg을 전량 독일에 수출, 게르마늄 648kg를 일본, 벨기에 등으로 수출했으나 전년 동월비 각각 1/13, 1/4 수준으로, 중국 당국이 수출을 허가하더라도 절차 상 지연이 발생할 위험이 있음
 - 다만 인구감소와 고령화, 부동산 위기, 경제성장 동력 약화, 실업률 증가 등 내부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고 국내 경기 부양을 위해 외자 유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중국 내 외국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보복조치나 핵심광물의 수출 전면통제 등 강경 대응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

88) Inside US trade(2023.11.14.), “Auto industry fears China could use graphite controls to reverse EV ‘friendshoring’”, Inside US trade.

2. 기술 패권 경쟁

(1) 인공지능

□ AI 규제에 대한 글로벌 표준이 부재한 가운데 기술을 선도하기 위한 주요국간 경쟁 심화

< 표12. EU 인공지능법안과 미국의 AI 행정명령 비교 >

	EU 인공지능법안(AI Act)	美 AI 행정명령(AI EO)
공 통 점		
기반모델 ⁸⁹⁾	AI 기반모델 개발에 엄격한 의무사항을 부여함으로써 AI 기반모델을 통제하고자 함	
테스트 및 모니터링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AI 시스템을 테스트 및 모니터링할 필요성 부각 - 개발자에게 출시 전 테스트와 출시 후 모니터링 절차를 준수할 것을 요구	- 오남용 및 비윤리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테스트 및 모니터링의 중요성 언급
개인정보 보호	AI 시스템을 훈련시키기 위한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 강조	
사이버보안	사이버보안 표준 준수 요구	
차 이 점		
집 행	EU 단일시장 및 모든 산업에 바로 적용 가능한 통일된 규제 제정	민간산업을 직접 규제하지 않으며 강제력이 없음 - AI 개발 관련 산업표준, 가이드라인, 관행, 규제를 만들 권한을 정부부처에 부여
주요 초점	위험수준에 따라 AI 시스템을 분류하는 위험 기반 규제 프레임워크	표준 및 가이드라인에 중점, AI 관련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국제협력 중요성 강조
지식재산	개발자에게 생성형 AI 시스템에 투입되는 저작권 보호 재료의 완전한 공개를 요구 (논의 진행 중)	지식재산 보호에 시가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지식재산권과 시간 명확한 경계 설정 지지
기 타	기업의 준수 측면에 중점	이민, 교육, 노동 관련 이슈 포함

자료 : Fauchoux V (2023), "Artificial Intelligence: Joe Biden's Executive Order vs. the European AI Act - Common Goals?".

○ (EU) AI 관련 빅테크 기업이 부재한 EU는 AI 규제에 가장 적극적이며, AI 기술을 육성하기보다는 미국 빅테크 기업에 헐값에 학습화된 데이터를 넘기지 않기 위해 보호장벽을 치는 것에 초점

- EU 의회는 지난 6월 AI 기술에 관한 포괄적인 규제를 담은 최초의 법안인 인공지능법안(AI Act)에 대한 수정안을 채택하였으며, 회원국 및 관련 부처들과의 최종 협의를 거쳐 2년의 유예기간 후 '25년 말~'26년 초 시행 예상
- 인공지능법안은 AI의 위험을 ▲허용될 수 없는 위험, ▲고위험, ▲저위험으로 구분하여 허용될 수 없는 위험을 가진 AI는 금지하고, 고위험 AI에 대해서는 엄격한 요구사항을 부과하는 등 차등 규제

89) AI 기반모델은 챗GPT 등 다양한 AI 과제의 시작점이 되는 대규모 사전훈련된 모델로, 방대한 데이터 세트를 학습하여 특정 목적에 부합하도록 맞춤형 학습이 가능.

- **(미국)** AI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있는 미국은 AI 규제 거버넌스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해 핵심 우방국들과 협력 강화 움직임
 -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0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에 대한 행정명령'(AI 행정명령)에 서명, 美 기업들이 국가안보, 경제, 공중보건 등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AI 모델을 테스트할 때 연방정부에 통지하고, AI로 만든 콘텐츠를 식별하기 위한 워터마킹 등 콘텐츠 인증 방침을 개발하는 것이 핵심
- **(블레츨리 선언)** 우리나라 포함 28개국 정상과 기업인 및 학계 전문가 약 100명이 참석한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 안전성 정상회의'(AI Safety Summit)가 지난 11월 영국에서 개최되어 AI 기술 안전에 관한 내용이 담긴 '블레츨리 선언(Bletchley Declaration)' 발표
 - 블레츨리 선언문에는 프런티어 AI로 불리는 고성능 범용 모델의 실존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AI에 대한 적절한 평가 지표, ▲안전 테스트를 위한 도구 개발, ▲고성능 AI 위험 식별 및 과학적 이해 구축 등에 대한 국제협력 방침 등의 내용 포함
 - 주요국, 특히 미·중 양국이 처음으로 AI가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공식적으로 협력을 다짐한 공동선언이란 점에서 상징성이 있으나, 구속력이 없어 각국의 산업 이해관계와 맞물려 AI 규제가 발전할 가능성이 높음
 - 블레츨리 선언에 대한 후속조치는 내년 5월 우리나라에서 열릴 미니 정상회의에서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

(2) 디지털

- EU는 디지털 주권을 강조하며 빅테크 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표준을 선도하고 있고, 중국은 안보 명분을 내세워 연이은 데이터 규제와 반간첩법 시행으로 해외 기업의 '데이터 디커플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자국 디지털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하던 미국의 입장에서도 최근 변화 감지

< 표13. EU·中·美의 최근 디지털 정책 비교 >

국 가	E U	중 국	미 국
목 표	빅테크 규제표준 선도	강력한 통제국가로의 회귀	노동자 중심의 통상정책 추진
주요 정책	- 디지털서비스법(DSA) - 디지털시장법(DMA)	- 반간첩법 개정안 시행 - 데이터안전법 본격 시행	- WTO 전자상거래 협상 일부 규범에 대한 지지 철회 - IPEF 디지털경제 부문 협상 타결 불투명

- **(EU)** 디지털 산업에서 美·中 기업의 우위와 유럽 내 디지털 대기업 부재에 따른 해외 기술 의존에 대한 우려로 최근 디지털 주권을 강조하며 빅테크 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표준 선도

< 표14. EU의 빅테크 주요 규제 내용 >

법 명	시 행	규제 내용	위반시 과징금
디지털서비스법 (DSA)	일부: '23.8월 전격: '24.2월	대형 플랫폼에 유해 콘텐츠 확산 방지, 타겟팅 광고 금지제한 등 의무 부과	글로벌 매출의 최대 6%, 반복 위반시 유럽시장 퇴출
디지털시장법 (DMA)	'24.3월 예정	거대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 남용 방지	글로벌 매출의 최대 10%, 반복 위반시 최대 20%

-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DSA)은 지난 8월 초대형 플랫폼⁹⁰⁾을 대상으로 조기 시행⁹¹⁾되었으며, 가짜 뉴스와 유해 콘텐츠의 확산 방지, 특정 사용자 타겟팅 광고 금지·제한, 규제기관 및 관련 연구원과 일부 내부 데이터 공유 등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며, 위반시 글로벌 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
 - '24.3월부터 시행 예정인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 DMA)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키퍼⁹²⁾로 지정,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⁹³⁾하는 규제로, 위반시 글로벌 매출의 최대 10%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중국)** 지난 7월 반간첩법 개정안을 시행하고, 데이터안전법의 유예기간을 끝내며 본격 시행과 단속에 나서는 등 강력한 통제국가로의 회귀 본격화
- 반간첩법 개정안은 국가 기밀과 관련된 정보 및 물품의 수집·전달·저장·사용·파괴·훼손·조작·판매 등을 간첩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
 - 중국은 '중요 데이터'⁹⁴⁾를 중국 본토에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당국의 허가 없이 해외 반출·제공을 금지하는 데이터안전법 단속 본격화
 - 이에 대응하여 중국 진출 다국적 기업들은 중국용 서버를 구축하고 중국에서 사용되는 노트북의 국외 반출을 금지하는 등 중국 지사의 IT 시스템을 분리하며 '데이터 디커플링' 가속화⁹⁵⁾

90) EU 전체 인구의 10% 또는 이용자가 4,500만 명 이상인 플랫폼으로, 분류된 기업 19개사 중 18개사가 미국 기업.

91) '24.2.17.부터 중소기업 대상으로도 DSA 전격 시행.

92) EU 내에서 최근 3개 회계연도 각각 연매출 75억 유로 이상, 직전 회계연도 평균 시가총액 750억 유로 이상, 최소 3개 회원국에서 핵심 플랫폼 서비스(중개서비스, 검색엔진, SNS, 동영상 공유 플랫폼, 메신저, 운영체제, 웹 브라우저, 가상버서, 클라우드, 광고 네트워크 서비스 등) 제공, 이용자 월간 4,500만 명 이상, 입점업체 연간 1만 개 이상 등.

93) 자체 제공 서비스 우대행위, 플랫폼 외부 사업과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초기 설치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나 앱을 지우지 못하게 하는 행위, 이용자 동의 없이 플랫폼 외부 정보 추적 행위를 금지하며, 제3자 서비스와 플랫폼 간 상호 운용, 입점업체의 플랫폼 이용시 생산되는 데이터에 대한 접근, 플랫폼 외부에서 입점업체 자체 사업에 대한 홍보계약을 허용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

94) 변조·파괴·유출되거나 불법취득·불법사용시 국가안보·경제·사회안정·공중보건·공공안전 등을 해칠 수 있는 데이터.

95) Ryan McMorrow, et al.,(2023.7.16.), "Multinationals in China accelerate push to decouple data", Financial Times.

- **(미국)** 그동안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에 기반하여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을 지지해왔으나, 노동자 중심의 통상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우려와 일부 노동자에 대한 디지털 전환의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해 기존 협상 포지션을 재검토하려는 움직임
-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0월 디지털 무역에 대한 각국의 충분한 정책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데이터 이동, 데이터 현지화, 소스코드 등 WTO 전자상거래 협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규범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다고 발표⁹⁶⁾
 -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서도 논란이 많은 일부 디지털 경제 부문에 대한 협상이 중단⁹⁷⁾되면서 디지털 경제 부문에 대한 협상 타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⁹⁸⁾

< 표15. 주요 데이터 규범에 대한 美 경제계 vs 노동계 입장 >

경 제 계	vs.	노 동 계
국경간 데이터 이동 제한 조치는 비관세장벽 - 자유로운 국경간 데이터 이동 지지 - 데이터 현지화 반대 - 당국에 의한 소스코드·알고리즘 강제 이전 반대	데이터 규범에 대한 입장	- 국경간 데이터 이동을 반대하진 않으나, 디지털 경제의 부정적 영향을 규제할 수 있는 정부·의회의 권한 필요 - 국경간 데이터 이동 제한, 데이터 현지화, 당국에 의한 소스코드·알고리즘 강제 이전 등은 정부의 유효한 규제수단
USMCA와 미-일 DTA를 모델 삼아 IPEF의 규범 범위 확대 필요	USMCA, 마일 DTA에 대한 입장	디지털 규제를 광범위하게 금지하고 예외 범위가 협소하여 의회의 권한이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

자료 : 정해영(2023),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참여국의 디지털 통상규범 분석 및 시사점”.

96) Inside US Trade(2023.10.24.), “U.S. to end support for WTO e-commerce proposals, wants ‘policy space’ for digital trade rethink”, Inside US Trade.

97) 특히 美 무역대표부는 협상 내내 협상이 야심적이지 않다는 경제계와 진보적이지 않다는 노동계 사이에서 제대로 된 협상 추진이 어려웠으며, 기존 USMCA 수준의 조항은 개발도상국의 반대에 부딪혀왔음.

98) Inside US Trade(2023.10.6.), “IPEF members finalizing parts of trade pillar; some digital pieces on hold”, Inside US Trade.

(3) 친환경 및 첨단산업

□ 주요국의 첨단산업 기술 육성을 위한 보조금 경쟁이 격화되면서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

○ (미국) 자국 중심의 반도체 및 친환경 산업의 공급망 재편을 위해 대규모 보조금 정책을 추진

<표16. 미국 반도체·친환경 산업 지원정책 주요 내용>

법안명	규제 산업	주요 내용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전기차·배터리·핵심광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경제 안정화, 제조업에 대한 투자 촉진 및 첨단기술의 연구개발, 산업 생산성 강화를 목표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청정 제조시설 투자 세액공제(\$63억),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160억), ▲일반 및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111억) 등에 3,690억 달러를 제공
반도체 과학법 (CHIPS Act)	반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내 첨단반도체 제조산업 육성을 위해 ▲반도체 제조시설지원(\$390억), ▲R&D 및 인력개발지원(\$110억), ▲반도체 제조·시설·장비 투자에 25% 세액공제(약\$240억) 혜택 제공

○ (EU) 미국의 산업정책 강화 기조에 대응하여 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 녹색 산업을 보호·활성화하기 위한 친환경 산업정책을 마련

<표17. EU 반도체·친환경 산업 공급망 강화 정책 주요 내용>

법안명	규제 산업	주요 내용
반도체법 (European Chips Act)	반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30년까지 세계반도체 시장점유율 확대(기존 10% → 20%)를 목표 반도체법을 통해 430억 유로, IPCEI를 통해 218억의 공공·민간 자금 지원 반도체 가치사슬 전반의 대규모 첨단기술 역량을 구축하고, 연구·개발·혁신을 지원하며 위기관리 및 대응을 위한 예방적 조치 마련 등
탄소중립산업법 (NZIA)	친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태양광, 풍력발전, 히트펌프 등 친환경 기술 투자 유치 및 탄소중립 산업의 기술 제조역량 확대를 위해 관련 규제를 단순화하고, 인력육성과 연구개발에 대한 재정지원 강화 등
핵심원자재법 (CRMA)	핵심광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EU 역내 핵심 원자재 공급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핵심 원자재에 대한 제3국 의존도 감소, 연구·혁신·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 관련 규제 및 절차 간소화, 모니터링을 통한 공급망 리스크 관리체계 강화 등
프랑스 녹색산업법	친환경·전기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럽 친환경 산업 보호와 자국 제조업 강화를 위해 전기차 생산과정의 탄소발자국, 재활용 및 바이오 기반 재료 사용, 배터리 수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차등 지급

□ 주요국들의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친환경 정책 기조가 유지되는 한편 중국의 친환경 및 첨단기술 발전에 대한 견제가 강화될 전망

○ (미국) 다양한 채널을 통해 동맹국과의 대중국 제재를 지속 강화하여 자국 중심의 공급망을 확보

- (IRA) 해외우려기관이 채굴, 가공 또는 재활용한 핵심광물이나 제조·조립한 전기차 배터리 부품이 포함된 전기차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 배제
- (반도체) 반도체 보조금 수혜기업의 해외우려국가 내 설비확장 및 기술 협력을 제한하고, 반도체 동맹을 통해 제3국의 첨단반도체·장비의 대중국 수출을 통제하며, 제3국과 공급망 위기 공동 대응 및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한 협력 등을 모색

○ (EU)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유사입장국들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중국의 의존도를 줄이고 첨단기술, 핵심광물 및 친환경 공급망 탄력성을 확보

- (반도체법) 반도체 동맹을 구축하여 정보교환, 위기 대응, 반도체 공급망 강화, 투자 및 수출통제 강화 등을 위해 협력할 계획
- (CRMA) 특정 국가에 대한 핵심 원자재의 과도한 의존을 제한*하기 위해 신재생 에너지 등 핵심 산업분야에 사용되는 16가지 전략원자재를 지정하고, 2030년까지 해당 원자재의 EU 역내 수요의 10%를 채굴, 40%를 가공·처리하고, 25%를 재활용하는데 잠정 합의('23.11.13.)

* 특정 국가에 대한 전략원자재 수입의존도를 65% 이하로 제한하고,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핵심원자재 확보를 위해 자원부국과 '핵심원자재 클럽'을 창설하는 등 글로벌 협력을 강화할 계획

- (EU) 집행위는 급증하는 중국산 저가 전기차로부터 유럽 전기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를 개시('23.9월)하고 중국의 자국 풍력터빈 및 과잉생산 철강 제품에 대해서도 반보조금 조사를 검토('23.10월)

□ 미국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시사하였으나 최첨단 기술에 대한 제재는 지속될 전망

- 미-중 정상회담('23.11월)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미군에 맞서는데 사용될 기술을 중국에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제재조치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⁹⁹⁾
- 미국은 대중국 규제 조치가 중국 경제를 저해하기 위함이 아닌 미국 국가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며, 어느 나라에도 미-중 간 선택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하는 한편 미국과의

99) 홍수진(2023.11.16.), “미중, 군사대화 재개-펜타닐 단속합의...타이완 수출통제는 이견”, KBS.

파트너십 결과를 있는 그대로 보여줄 것이라 강조¹⁰⁰⁾

○ 공개된 반도체 가드레일 규정 확정안('23.9월)에서 설비확장 및 기술 협력 제한에 대한 일부 예외를 두어 최악의 국면은 피했으나 미국의 추가 제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

— ①수혜기업이 기존 설비·장비의 생산능력은 10%까지(생산된 레거시 반도체의 최소 85%가 우려대상국 시장의 최종제품으로 소비되는 경우 제한 없음) 확장, ②국가안보 우려가 없는 활동 및 기존 공동 연구·기술 라이선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¹⁰¹⁾

— 수혜기업과 미국 정부 간 개별적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¹⁰²⁾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이 미국의 보조금을 받더라도 중국 내 운영 중인 설비를 유지하고, 제한적으로 기술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어 기업들의 부담이 완화될 전망

* 한국은 미국산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통제 조치에서도 무기한 유예(VEU)를 받았으나 이는 기존의 수출통제조치('22.10.7)에 국한된 것으로 핵심장비(EUV노광장비 등)에 대한 수출통제는 예외 없음

□ 주요국의 친환경 산업정책 확대로 세계 전기차 공급망이 본격 재편될 전망

○ IRA의 핵심광물협정을 중심으로 미국 주도의 배터리 공급망이 재편될 전망

— IRA는 전기차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리튬, 니켈, 망간, 흑연 등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이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조달될 것을 요구하며, FTA 미체결 국가와는 별도의 핵심 광물 협정(CMA)*을 추진

* 미국은 일본과 핵심광물협정을 체결하고, EU 및 영국과는 협상을 추진 중

— 아르헨티나가 미국과의 무역투자기본협정(TIFA)에 FTA와 유사한 지위를 부여할 것을 요구하고¹⁰³⁾ 인도네시아가 주요 광물에 대한 제한적 FTA 체결 추진 의사¹⁰⁴⁾를 밝히는 등 주요 광물 생산국들은 미국과 유사 협정 체결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전망¹⁰⁵⁾

100) Ana Swanson(2023.8.8.), "Biden to Restrict Investments in China, Citing National Security Threats", The New York Times; Department of state(2023.8.15.), "Department Press Briefing—August 15, 2023, Vendant Patel, Principal Deputy Spokesperson".

101) Department of Commerce (2023.09.25.), "Preventing Improper Use of CHIPS Act Funding".

102) 최용호(2023.11.1.), "미국 반도체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가드레일 최종규정의 내용 및 함의", 경제안보 Review, 23-19호.

103) Inside U.S. Trade(2023.6.23.), "Argentina argues its TIFA with the U.S. justifies access to IRA benefits", Inside U.S. Trade.

104) Stefano Sulaiman(2023.4.10.), "Indonesia to propose limited free trade deal with US on critical minerals", Reuters.

105) 고성은, 김경훈(2023.9.) "미국의 IRA 시행지침이 우리나라 배터리 공급망에 미칠 영향", KITA 통상리포트 제9호.

*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들은 IPEF의 한 부분으로 핵심광물협정 체결을 요청하는 등 IPEF 참가국들을 'FTA 체결국'과 동등한 지위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¹⁰⁶⁾

○ 프랑스판 IRA로 불리는 프랑스의 녹색산업법이 EU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어 향후 배터리 등 전기차 가치사슬 전반이 유럽 내 생산으로 재편 될 가능성

— 중국산 저가 전기차가 주 타겟으로 중국의 전기차 대유럽 수출에 타격을 줄 것이며 근접국인 한국산 전기차도 영향이 불가피* ('22년 세계적으로 판매된 1,000 만대 이상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중 440만 대가 중국산¹⁰⁷⁾)

* 생산과정에서 소비지까지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철강, 알루미늄, 기타 재료, 배터리, 조립, 운송)과 재활용 가능성 등 점수를 합산하여 환경점수가 60점 이상인 전기차에만 보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한국, 중국, 일본 등 원거리 제3국에서 생산되는 수입 전기차에 불리하게 작용

106) Steven Overly(2023.6.2.), "More countries line up for U.S.'S EV tax credits", Politico.

107) 김계환, 강지현(2023.10.), "프랑스판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전기차 보조금 제도의 내용과 시사점", 산업포커스, 산업연구원.

4. 무역장벽의 다양화

“중상주의적 질투는 폭력적인 민족적 적대감에 의해 자극되고 폭발한다.(Mercantile jealousy is excited, and both inflames, and is itself inflamed, by the violence of national animosity. Adam Smith)”

중상주의는 상업적 이익을 추구해 강력한 국가를 만들고자 하는 정부와 안정적 시장 확보를 원하는 상인이 의기투합한 사상이다. 과거 대표적인 무역장벽은 관세조치였다. 1930년 ‘스무트-홀리법’은 대공황에 시달리던 미국에서 자국 상품을 보호하고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영국, 프랑스 등 경쟁국은 관세를 앞다퉈 인상하며 보복조치를 단행했고, 국제무역은 위축되어 세계경제에 큰 타격을 입혔다. 국가간 갈등 심화는 파시즘 같은 극단주의의 득세로 이어졌고, 결국 두 번째 세계대전이 발발했다. 큰 아픈 경험을 한 주요국은 규범에 근거하여 글로벌 무역자유화를 시도했고, 국제무역기구(ITO) 출범은 실패했지만 상품분야에 대한 규범인 GATT 체제가 가동될 수 있었다. 이후 지속적으로 무역자유화와 규범협상을 시도했고, 우루과이라운드(UR)를 거치며 WTO가 출범했다. GATT/WTO 체제를 통해 급진적인 관세인상 조치는 발생하지 않았고, 다양한 비관세장벽도 새로운 규범과 무역정책검토제도, 분쟁해결제도 등을 통해 개선되거나 억제되었다. 그러나 WTO 분쟁해결제도의 약화와 개혁이 지연되고, 미중 패권경쟁 심화에 따른 진영화와 공급망 재편으로 주요국의 무역장벽은 다시 높아져가고 있다.

그 원인과 과정이 무엇이든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막대한 보조금 지급, 수출과 투자제한을 통한 공급망 배제, 독점적 지위를 통해 영향력을 전세계에 미치는 지금은 2차대전 후 형성된 국제질서 하에 그 어느 때보다 중상주의적이다. 촘촘하게 연결된 GVC와 물류는 특정국의 무역장벽으로도 타격을 입을 수 있고, 초연결 하에 주변국 뿐만 아니라 지구 반대편의 국가도 상응하는 무역장벽을 세울 수 있는 상황이다. 탄소국경조치의 근본 취지는 글로벌 탄소배출 저감일 것이나, 해당 시장으로 수출하는 기업과 국가 입장에서는 스스로 설정한 목표에 불리해진 국내 산업을 위한 무역장벽으로 비춰질 수 있다. ‘클린 스틸’이 과연 기후와 환경을 훼손하지 않으며 생산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가운데, 컨센서스가 없는 일방주의의 심화는 전통적인 수입규제 조치와 관세인상 빈발도 야기할 수 있다.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공허한 2024년이 될 수 있다.

1. 새로운 보호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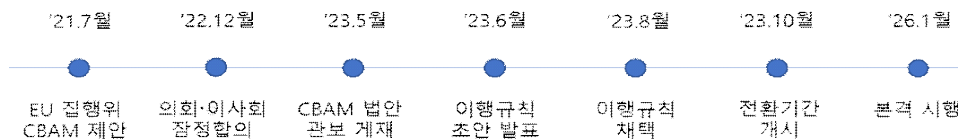
(1) CBAM

- EU 집행위가 탄소누출 방지와 역내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발표한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의 전환기간이 '23.10.1. 개시
- CBAM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55%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Fit for 55’¹⁰⁸⁾

패키지의 일환으로 EU 집행위에서 제안됐으며('21.7.14.), 유럽 의회 합의를 거쳐 공식 채택('23.5.10.)

- CBAM 전환기간('23.10.1.~'25.12.31)동안 적용될 이행규칙은 2023년 6월 13일 초안이 발표된 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당해년도 8월 17일 확정
- 이행규칙에는 '적용대상 품목', '수입업체의 보고의무', '온실가스 내재배출량 계산 방법', '보고서 제출 절차', '보고의무 미준수 과태료', '비밀유지 의무' 등의 내용이 포함

〈그림14. CBAM 입법동향 및 시행시기〉



- (적용대상)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 수소 6개 품목과 상기 품목 제조과정에 사용되는 전구체, 볼트, 너트 등 일부 다운스트림 제품들이 대상¹⁰⁹⁾
- '21년에 공개된 초안 대비 수소와 다운스트림 제품이 추가됐으며, 전환기간 이후 본격 시행기('26.1.1~)에 유기화학품, 폴리머 등 탄소누출 위험 품목이 추가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음
- EU 집행위는 전환기간 종료('25.12.31.) 전까지 확대적용 품목을 선별할 계획이며, 2030년까지 EU ETS의 모든 대상 품목에 대해 CBAM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함
- (보고의무) 수입업자 또는 통관대리인은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 수입상품에 대한 정보를 담은 CBAM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
- (보고내용) 신고인은 수입상품 및 상품의 내재배출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원산지국에서 지불한 탄소가격이 있다면 해당 정보를 CBAM 보고서에 반영 필요¹¹⁰⁾
- (보고절차) '23.10월부터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 CBAM보고서를 CBAM 전환기간 등록부에 제출하며, 해당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 수정 가능*

108) Fit for 55 패키지는 유럽그린딜(European Green Deal, 2019.12.11.)을 이행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여기에는 “EU ETS개정 및 확대”,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재생에너지지침 개정”, “사회기후기금 및 현대화기금 지원대책” 등 EU 기후목표 달성을 위한 총 13개의 입법안 패키지가 담겨있음.

109) 「EU CBAM 이행규칙 부속서 II」에서 대상품목의 CN코드 확인 가능.

110) EU CBAM 이행규칙 제3조, 제7조.

*단, 처음 두 보고 기간(1차~2차)에 대한 보고서는 3차 보고서 제출 마감일('24.7.31.)까지 수정 가능

- '24.1.31. 첫 보고서 제출을 시작으로 2026년 1월까지 총 9차례의 보고서 제출 의무가 예정

<그림15. CBAM 보고서에 제출하여야 하는 정보>

- | | |
|---|---|
| (1) 보고자 및 대리인 관련 정보
- 식별번호, 이름, 역할, 주소 등 | (9) 역내가공 정보 |
| (2) 수입업자 관련 정보 | (10) 상품의 총 내재배출량 |
| (3) 관할당국 | (11) 상품의 직·간접 내재배출량 |
| (4) 상품 코드 및 품목번호 (HS, CN) | (12) 생산방법 및 적격매개변수 |
| (5) 원산지, 수입국가 | (13) 생산시설에 관한 정보
- 생산시설의 총 배출량 및 직·간접배출량 |
| (6) 적용가능한 보고방법 | - 배출측정 단위 |
| (7) 통관절차에 따른 수입량 | (14) 기지불한 탄소 가격
- 탄소부담금 유형, 환율, 금액 등 |
| (8) 상품의 매계변수 | |

□ (내재배출량 계산) EU 산정방식인 '계산기반 접근방식'과 '측정기반 접근방식' 중 택일하여 계산

○ '24년말까지는 EU 방식과 범위 및 정확도가 유사한 제3국 산정방식 등을 이용할 수 있으나, 2025년 1월 1일부터는 EU 산정방식만 인정되므로 주의

- 보고에 필요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정보가 부족한 경우, 2024년 7월 31일까지는 이행규정 부속서 VIII와 부속서 IX에 제시된 기본값을 사용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가능

<표18. 온실가스 내재배출량 산정 방법 비교>

	내재배출량 산정방법	내용
EU 산정방법 (中 택1)	계산기반 접근방식	• 실제 측정 시스템을 통해 획득한 전체 공정 데이터와 실험실 분석 또는 표준값 등 추가 계수에 근거하여 계산
	측정기반 접근방식	• 배기가스 내 온실가스 농도를 지속적으로 측정하여 배출량 결정
일정기간 적용 가능한 방법		• 조건부 제3국 산정방식 (2024.12.31. 限) • 이행규정 부속서 VIII, IX 에 제시된 기본값 (2024.7.31. 限)

□ (인증서) CBAM 인증서란 무상할당량을 초과하는 고유내재배출량에 대해 구매해야하는 배출권으로서, 인증서 1개당 온실가스 1톤이 적용되며 EU 배출권거래제(ETS)와 가격 연동

○ 전환기간동안 CBAM 인증서 매입의무는 발생하지 않으며, 인증서 가격은 EU-ETS 공동경매플랫폼에서 매주 EU ETS배출권 증가평균가격에 기초하여 계산*

*2023년 3분기 기준 EU ETS배출권 평균 가격은 80~85유로 내외로 형성

- CBAM은 '26.1월 본격 시행된 이후 약 8년간 EU-ETS 와 함께 운영 된 뒤 2034년부터 전면 도입 예정

〈표19. EU-ETS 무상할당량 감축 계획〉

연도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폐지율(%)	2.5	5	10	22.5	48.5	61	73.5	86	100

- (유예의무 및 과태료) 전환기간 동안 수입업자는 승인요건과 내재배출량 검증 의무로부터 유예되거나 보고의무 미준수시 1톤당 10~50유로의 과태료 부과
- EU 역내 생산업자와 제3국 사이의 공정한 경쟁관계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도입된 CBAM이 본격적으로 전환기간에 돌입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부담 심화
- 전환기간 보고의무 미이행시 과태료가 예정되어 행정부담은 더욱 커진 상황이며, 2026년 제도 본격 시행시 CBAM 인증서 구매, 수출기업 내재배출량 직접 등록 등 우리 기업의 업무 가중 예상
-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비중이 높은 품목에서의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며, 향후 대상품목 확대에 대비해 업계 전반적으로 CBAM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필요
- 장기적으로 EU는 저탄소 상품으로의 공급망 재편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CBAM 대응을 넘어 탄소 중립 경영 강화, 공급망 재편 대응 등 탄소 경영 전략 모색 필요
- CBAM의 가장 큰 영향을 받는 품목은 철강으로서, 2023년 10월 기준 對EU 수출액은 약 36억 달러로 대세계 수출액의 12.5%, 對EU 총수출의 4.6%를 차지
- 두 번째로 큰 영향을 받는 알루미늄 품목은 2023년 10월 기준 약 3.4억 달러를 수출하며 대세계 수출액의 9.3%, 對EU 총수출의 0.4%를 차지
- 비료 품목은 상대적으로 對EU 수출 비중이 적으나, 중소·중견기업들의 비중이 높아 철강 업계 대비 준비가 부족한 상황
- 전환기간 이후 CBAM 적용 대상 품목이 유기화합물, 폴리머 등으로 확대된다면 한국의 부담은 더욱 커질 가능성
- 폴리머 수출액은 2023년 기준 약 37억 달러로서 철강 수출액과 유사한 수준이며, 유기화합물 수출액은 2023년 기준 약 18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두 품목이 대세계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6%에 달함

<표20. CBAM 적용품목의 대세계 및 대EU 수출금액('23년 1월~10월)>

(단위: 천 달러, %)

구분	품목명 ¹¹¹⁾	對세계 수출(A)	對EU 수출(B)	對EU 수출 비중 (B/A)	(B)/對EU 총수출
전환기간 적용대상품목	철강	29,006,255	3,618,204	12.5	4.6
	알루미늄	3,659,691	342,124	9.3	0.4
	비료	447,839	7,045	1.6	0.0
	시멘트	88,182	0*	0*	0.0*
	수소	86	0*	0*	0.0*
	전기	0	0	0	0.0
확대가능품목	유기화합물	17,477,083	1,755,252	10.0	2.2
	플리머	29,409,170	3,697,770	12.6	4.7

자료: 한국무역협회

* 실제 수치는 0이 아니며 단위 조정에 따라 0으로 표기

□ 내재배출량 산정 방법을 비롯한 세부 사항은 향후 위임법률(Delegated acts)과 이행법률(Implementing acts)에서 구체화 될 예정

○ '23.4월 확정된 CBAM 규칙은 위임법률과 시행법률에서 규정될 사안을 제시했으며, 이 중 보고의무(Reporting Obligation)와 관련된 이행법률이 '23.6월 발표되었고 나머지는 전환기간 내에 초안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

- 제3국 지불 탄소가격 차감 기준, 수출업자의 내재배출량 직접 등록 방식, CBAM 인증서의 판매·환매 방식 등을 비롯한 구체적인 사항이 향후 발표될 법률에서 규정 될 예정

- CBAM 전환기간은 이해관계자(수입업체, 수출업체, 정부)를 위한 시범운영기간으로서 제품별 탄소배출량 파악 및 내재배출량 산정 방법을 개선하는 것에 의의가 있으므로, 업계 관계자는 전환기간동안 CBAM 의무 준수 체계를 갖추어나가는 동시에 향후 발표될 법안을 예의주시할 필요

111) CBAM 이행법안 부속서 II에 기재된 대상품목의 CN 코드 중 6자리 HS 코드를 기준으로 수출액 산정.

<그림16. 발표 예정 위임법을 및 이행법을 목록>

Delegated acts	Implementing acts
Article 2.10 & 2.11 (scope) Article 18.3 (Accreditation of verifiers) Article 20.6 (Sale of CBAM certificates) Article 27.6 (Circumvention)	Article 2.2 (scope) Article 5.8 (Application for an authorisation) Article 6.6 (CBAM declaration) Article 7.7 (Calculation of embedded emissions) Article 8.3 (Verification of embedded emissions) Article 9.4 (Carbon price paid in a third country) Article 14.6 (CBAM registry) Article 17.10 (Authorisation) Article 18.1 (Accreditation of verifiers) Article 21.3 (Price of CBAM certificates) Article 25.6 (Rules applicable to the importation of goods) Article 31.2 (Free allocation of allowances under the EU ETS and obligation to surrender CBAM certificates) Article 35.7 (Reporting obligation) – '23.6월 초안 발표

(2) GSSA

- 미국과 EU는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분쟁을 해결하고 비시장경제국·과잉생산국에 대한 무역규제를 본격화하기 위해 ‘글로벌 지속 가능 철강·알루미늄 협정(Global Arrangement on Sustainable Steel and Aluminium, 이하 GSSA)’을 추진
- 바이든 행정부와 EU는 ▲미국의 232조에 따른 철강제품에 대한 25%에 대한 관세를 관세할당제(일정 수준의 EU철강 및 알루미늄은 무관세 허용)로 대체하고 ▲EU의 미국 산 수입 철강에 대한 보복관세를 '23.10월까지 유예하는데 합의('21.10월)
 -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하여 외국산 수입품(철강25%*, 알루미늄10%)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EU가 철강 및 알루미늄, 농산물, 오토바이, 위스키 등 미국산 수입품에 10~50%의 보복관세(약28억 유로, 철강25%)를 부과하여 양측의 관세 분쟁이 발발¹¹²⁾
- * 한국, 호주,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일부 국가는 미국과 별도의 쿼터를 합의하여 철강 관세 대상에서 제외

112) European Commission(2018.6.20.), “EU adopts rebalancing measures in reaction to US steel and aluminum tariffs”, press release”; Karl Tsuji(2022), “US-EU Joint Statement Modifies U.S. Section 232 Steel and Aluminum Tariffs, Lifts EU Retaliatory Tariffs, and Announces Negotiations of a First-ever Carbon-based Sectoral Arrangement”, Executive Briefings on Trade,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 미국과 EU는 GSSA를 통해 ▲비시장적 과잉생산* 유발 비참여국의 시장접근 제한, ▲탄소기준미달 비참여국의 시장접근제한, ▲탄소집약도 개선을 위한 국내 정책 지원보장, ▲탈탄소화를 위한 정부투자에 협의 등을 이행하는데 합의¹¹³⁾

* OECD는 세계 철강생산능력이 2023년 25억 톤으로 사상 최고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미국과 EU는 연말까지로 예정되어있던 기간 내 GSSA 합의 도출에 실패하였으나 '25.3.31.일 까지 관세유예기간을 연장할 것에 합의

- '23.12월말까지 양측의 GSSA 합의 도출 실패 시 미국의 232조 관세 및 EU의 보복관세가 재가동될 우려가 있었으나 이번 관세 유예기간 연장 합의로 '25.3.31일까지 관세가 유예되었으며 미국은 EU수출품에 대해 추가적으로 관세를 면제할 것에 합의('23.12.19.)¹¹⁴⁾

- 양측은 정상회담('23.10.20, 워싱턴DC)에서 GSSA 잠정 합의를 이루는 방안을 모색하였으나* 절충점을 찾지 못하였고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 사태,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에 대한 의제가 회담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연말까지 협상을 지속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 당초 양측은 중국과 같은 비시장 경제의 과잉생산 능력에 대처하고 친환경 철강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에 합의하는 조건으로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수입제한을 '23.10월까지 유예¹¹⁵⁾

- 양측은 비시장경제국의 철강 과잉 생산과 탈탄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에 합의하였으나, 입장차이로 GSSA에 대한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

- (관세폐지) EU는 관세할당제도의 완전 철폐를 요구한 반면 미국은 연장을 제안했던 것으로 파악

- EU는 '23.10월 정상회담에서 GSSA 타결이 불발된 이유를 미국이 232조 상 관세 할당량을 어떻게 폐지할지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은 탓이라고 밝힘¹¹⁶⁾

- 한편 EU는 EU수출품에 대한 미국의 232조 관세의 영구철폐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밝힘*¹¹⁷⁾

113) USTR(2021.10.1.), "Steel and Aluminum, US-EU Joint Statement".

114) Eurometal(2023.10.23.), "US, EU extend negotiations on global steel, aluminum pact as no deal reached at summit", Eurometal; Ari Hawkins(2023.12.18.), "EU to give Biden lifeline with tariff truce", Politico.

115) Andrea Shalal and Jeff Mason(2023.10.21.), "EU, US to keep talking about tariffs as war in Israel and Ukraine overshadow talks", Reuters.

116) Alberto Nardelli and Jennifer Jacobs(2023.10.21.), "EU Says Lack of US Clarity on Tariffs Sank Trade Announcement", Bloomberg.

117) European Commission(2023.12.19.), "EU prolongs tariff suspension for US products related to the steel and aluminum dispute".

- * 미국은 올해 말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더라도 관세를 다시 부과하지 않고 2년 전 합의한 관세할당제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던 반면, EU는 TRQ조건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약 60억 달러의 미국 수출품에 대해 보복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음
- (비시장경제·과잉생산) 미국은 비시장경제국의 철강 과잉생산에 대응하고 친환경 철강을 촉진하기 위해 EU가 중국산 철강생산업체에 관세를 적용하기를 요구하였으나, EU는 1년의 조사기간 없이 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WTO협정에 위반된다고 반대¹¹⁸⁾
- (철강클럽) 미국은 비시장경제국 제품의 최소 70%에 대해 철강(25%), 알루미늄(10%)의 공동 관세 부과할 것을 제안한 반면 EU는 덤핑 및 보조금 조사 등 전통적인 무역구제조치를 통해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¹¹⁹⁾
- 최근 EU는 미국과의 관세 분쟁 합의의 일환으로 중국 과잉생산 철강제품에 대해 불공정 보조금 혜택 조사계획을 밝혔으나 EU가 이미 10여 개의 중국산 철강(232조 대상 제품의 절반가량)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였다는 점에서 실효성 문제가 대두¹²⁰⁾
- (CBAM) 미국은 미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해 CBAM 면제를 요구하였으나, EU는 GSSA가 적용되는 미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을 면제해주는 것은 최혜국대우 위반이라는 입장

2. 수입규제와 관세인상

(1) 美, 수입규제 제도 강화

- 美 상무부는 반덤핑·상계관세 규칙 개정안을 발표했으며, 의회에서도 유사한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되는 등 수입규제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이어질 전망
- 美 상무부는 무역구제(수입규제)의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반덤핑·상계관세 규칙 개정안 발표 (5/9)
 -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7/10) 점검 중에 있으며, 이전의 규칙 개정절차를 미루어볼 때 최종 규칙 발표 및 시행까지 약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¹²¹⁾

118) Andrea Shalal and Jeff Mason(2023.10.21.).

119) Ana Swanson(2022.12.7.), "U.S. Proposes Green Steel Club That Would Levy Tariffs on Outliers", The NewYork Times; Camille Gijs and Sarah Anne Aarup(2023.10.11.), "It's EU and US against the rest of the world in new steel club", Politico pro; Sarah Anne Aarup and Camille Gijs(2023.10.17.), "EU-US metals talks go down to the wire ahead of Friday summit", Politico pro.

120) Andy Bounds(2023.10.10.), "EU plans anti-subsidy probe into Chinese steelmakers", Financial Times.

121) Daniel Cannistra, et al.(2023), "Comment Window Closes for Proposed Commerce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Rules: Foreign Governments, Trade Associations, and Companies Weigh in on

- 상무부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여, 향후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을 대상으로 고율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할 우려가 있음

<참고4. 美 상무부 반덤핑·상계관세 규칙 개정안('23.5월) 핵심 내용>

- 1) **특별시장상황(PMS)** : '특별시장상황'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정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핵심 투입요소의 공급과잉 및 공기업에 의한 생산통제 상황도 '특별시장상황'으로 간주
- 2) **외국정부 무대응(inaction)** : 직접적인 보조금 지급 외에 인권, 노동, 환경, 지적권 관련 외국 정부의 미흡한 대처(무대응)가 가격 왜곡을 초래한다고 간주해, 반덤핑·상계관세를 산정 시 수출국 가격 불인정(수출국에 불리한 산정 방법)
- 3) **초국경 보조금** : 제3국 정부가 수출국 소재 기업에 제공하는 보조금도 규제 대상으로 간주

- 무역구제제도의 집행을 강화하기 위한 상무부 차원의 규칙 개정은 이전부터 지속되어 왔음

* 2021년 9월 우회조사, 범위조사, 신규수출자 재심 등의 절차를 명확히 하며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반덤핑·상계관세 규칙이 개정되었으며, 2020년 2월에는 통화 저평가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보조금 판정 요건의 일부가 개정되었음

- 美 의회에서도 무역구제제도를 강화하려는 노력이 매년 이어지고 있으며, 2023년에도 상·하원이 공동으로 '공정한 경쟁의 장 법안 2.0(Leveling the Playing Field 2.0)'을 재발의(6/7)

- 2021년 상·하원에서 공동 발의한 법안을 일부 수정하여 재발의한 것이며, 유사한 내용이 하원의 대중국 견제 패키지 법안인 '미국경쟁법안(America COMPETES Act)'에도 포함된 적이 있음

* 대중국 패키지 법안이 상원에서는 '미국혁신경쟁법(USICA)'으로, 하원에서는 '미국경쟁법안(America COMPETES Act)'으로 각각 발의되었으나, 반도체산업 지원과 관련된 내용만 합의를 거쳐 '반도체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으로 통과되면서 하원버전 패키지 법안에만 포함된 수입규제 관련 내용은 최종 법안에 반영되지 않음

- 생산지 이전으로 반덤핑·상계관세 조치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연속(Successive)' 조사 항목을 신설하고, 일대일로를 통해 중국 정부가 지급하는 국경 간 보조금을 조사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우회조사의 절차와 일정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미국의 대한민국 수입규제 신규 조사 건수가 2023년 들어 다소 증가했으며, 품목이 다양해지고 조사방법 중 일부 강화된 부분이 있어 주의가 필요

- 대한민국 수입규제 신규 조사 개시 건수가 2021년 바이든 행정부 이후 줄어드는 듯했으나 2023년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표21. 미국의 대한국 수입규제 조사 개시 추이(유형별)>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우회수출	계
2017년	6	-	2	-	8
2018년	1	1	-	-	2
2019년	5	-	-	-	5
2020년	6	1	-	-	7
2021년	2	1	-	-	3
2022년	-	-	-	1	1
2023년 1~10월	3	1	-	2	6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입규제 DB

주: 우회수출은 미국이 한국을 경유지로 지목하여 개시된 조사 건만 집계하며, 한국산 제품이 제3국을 경유한 혐의에 대한 조사는 포함하지 않음. 전자의 경우 우회수출 조사에서 긍정판정이 내려지면 해당 품목을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 시 제3국에 부과되는 반덤핑·상계관세가 추가로 부과됨

- 철강 제품은 이미 다수의 조사가 개시되어 규제중에 있으며, 2023년에는 비철금속 제품 위주로 조사가 개시되고 있음
 - 주석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2월 개시되었고, 5월에는 황동봉에 대해 반덤핑·상계관세 조사가 동시에 개시되었으며, 10월에는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 조사가 있었음
 - 철강제품과 달리 비철금속 기업의 경우 규모가 대체로 크지 않아 조사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음
- 중국산 알루미늄 제품이 한국을 경유하여 미국으로 우회수출되고 있다는 혐의로 최근 3건의 조사가 개시되었음
 - 2022년 7월에 개시된 중국산 알루미늄 포일 우회수출 조사가 예비판정에서 긍정판정이 내려져('23.3월), 향후 국내에서 미국으로 알루미늄 포일 수출 시 중국산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빙이 있어야 중국에 부과되는 반덤핑·상계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 중국산 제품이 한국을 경유하는 혐의와 관련해 7월에는 알루미늄 시트에 대해서, 10월에는 알루미늄 전선에 대해 조사가 개시되었음
- 미국 상계관세 조사에서 한전의 전기료가 보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올해 처음으로 긍정판정이 내려져 향후 매년 이루어지는 반덤핑·상계관세 연례재심에서 주의가 필요
 - 철강후판 2월 예비판정과 8월 최종판정에서 한전의 전기료가 보조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내려져 상계관세율이 상향 조정된 바 있음. 전기로 등 다량의 전력을 사용하는 분야에서 주의가 필요

(2) EU, 보조금 조사를 활용한 보호주의

-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EU 집행위가 직권으로 상계관세 조사를 개시하였으며, 일각에서는 동 조사를 두고 보호주의적인 조치라고 평가
- EU 산업계의 제소 절차 없이 집행위 직권으로 조사가 개시되었다는 점과 전기차가 일반적으로 수입규제 조치 대상이 되는 품목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례적
 - 폰테아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유럽의회 연례정책 연설에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를 개시하겠다고 발표(9/13)한지 20여 일 만에 상계관세 조사를 공식 개시('23.10/4)
 - 개시일로부터 최대 13개월 내에 최종판정이 내려질 예정이며, 9개월 내 예비판정이 내려져 잠정조치가 부과될 예정
 - 중국산 전기차 수입이 급증한 이후 조사가 개시된 점에서 EU 내 전기차 산업을 보호하고 EU 역내로 생산시설을 이전하도록 촉구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
 - 2023년 7월까지 유럽 전기차 시장에서 판매된 전기차 물량 중 중국 브랜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8%에 이르렀으며, 이는 2021년 4%, 2022년 6%에서 지속 상승한 수치¹²²⁾
 - 최대 수출자인 테슬라가 조사 대상에서 빠져, 직접 대응이 불가능한 테슬라가 중국 기업에 부과되는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아 결과적으로는 유럽 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석되기도 함
 - * 2023년 상반기 동안 중국 전체 전기차 수출에서 테슬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39%로 SAIC(26.3%), BYD(16%)보다 높았음¹²³⁾
 - 동 조사와 관련해 EU 회원국마다 입장이 상이하고, 보조금 수혜 여부를 밝혀낼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어 판정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움
 - 프랑스 정부는 중국산 전기차의 불공정 경쟁을 해소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촉구한 반면, 독일의 경우 중국의 보복조치 인해 대중국 수출과 중국 내 투자 기업의 타격을 우려하며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음
 - EU는 중국산 전기차 가격이 EU 내에서 생산되는 전기차 가격보다 20% 낮은 점을 문제 삼고 있지만, 중국은 외국으로 수출되는 전기차 가격이 내수 가격보다 높다는 점과 신에너지차에 대한 구매 보조금이 2022년 말 종료되었다는 점을 강조
 - 과거 중국산 태양광 패널 반덤핑·상계관세 조사에서 독일 등의 국가들이 중국에 대해 조치를 부과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으며, 이후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대신 중국 측이 가격인상(price

122) Victoria Waldersee(2023.9.5.), "Europe's carmakers fret over China's EV prowess at Munich car show", Reuters.

123) Mazzocco, Sebastian(2023), "Electric shock: Interpreting China's Electric Vehicle Export Boom", CSIS.

undertaking)을 약속하며 상황이 일단락된 적이 있음¹²⁴⁾

- 다만, 이후 중국이 태양광 산업에서 경쟁력을 장악한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전기차 등 친환경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유럽이 쉽사리 물러서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 EU의 보조금 조사가 다른 국가나 품목으로 확대될 위험을 배제할 수 없어 주의가 필요함
 - 우리나라도 EU로 수출되는 전기차 물량이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어 안심할 수 없음
 - EU는 전기차에 이어 중국산 풍력 발전용 터빈과 철강에 대해서도 불공정 보조금 혜택 조사 여부를 검토 중이라 밝힘
- 한편, 임기 만료를 앞둔 폰테라이엔 위원장이 두 번째 선임을 위해 지지세력을 확보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됨

(3) 자국산업 보호 명목 하의 임의적인 관세 인상

□ 멕시코는 철강을 비롯한 392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최대 25%까지 기습적으로 인상 ('23.8월)

* 철강 외에 알루미늄, 고무, 화학제품, 섬유 등이 대상이며, 이 중 철강 및 철강제품이 219개로 가장 많음¹²⁵⁾

- 해당 조치는 자국산업 보호를 명목으로 그간의 관세 인하 기초를 뒤집고 급작스럽게 관세를 인상한 점이 특징적
 - 8/15일 멕시코 관보에 게재된 이후 바로 다음날인 8/16일 즉시 발효되었으며, 동 조치는 2025년 7/31일까지 적용될 예정
 - 2022년 6월부터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철강 제품의 관세를 인하할 것이라고 밝힌 멕시코의 종전 발표('21.11/23)와 배치. 실제로 관세 인상안 발표 전 철강 품목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10%로 낮췄으며, 향후 5%로 인하할 계획을 밝힌 바 있음
- 공정시장 회복, 국내 산업의 회복 촉진, 내수시장 지원 등의 목표를 내세우고 있으나,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입김이 어느 정도 작용한 것으로 보임
 - 美 철강의원연맹은 5월 러ndon도 美 상무부 장관과 타이 USTR 대표에게 멕시코로부터의 철강 수입 급증을 문제 삼는 서한을 발송. 232조 조치 대상 국가에서 생산한 철강이 멕시코의 무관세를 적용받아 미국에 우회수출 되고 있음을 지적

124) Robin Emmott, et al.,(2013.7.27.), "EU, China resolve solar dispute - their biggest trade row by far", Reuters.

125) Alejandro N Gomez-Strozzi, et al.,(2023.8.23.) "Mexico increases import tariffs for non-Free Trade Agreement countries", FOLEY.

- USTR은 7월 멕시코 경제부와의 회동에서 동 문제를 지적하며 대응을 요구하였으며, 회동 이후 타 이 대표는 멕시코 정부가 멕시코 수출 모니터링 시스템을 복원하기로 약속했다고 발표
- 실제로 2019년 멕시코는 미국으로부터 232조 조치를 면제받을 당시 제3국으로부터의 철강·알루미늄 수입에 대해 투명성을 보장하기로 약속
- 멕시코의 관세 인상 발표 후 USTR은 동 조치에 대해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8/19)
- 중국 기업의 미국 진출을 위한 경유지로 멕시코가 지적되어 온 만큼 향후에도 비슷한 양상의 수입장벽을 배제할 수 없으며, 한국은 멕시코와 FTA가 체결되지 않아 각별히 주의가 필요
- USMCA를 체결한 미국이나 CPTPP를 체결한 일본과 달리 한국은 아직 멕시코와 FTA가 체결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
- * 다만, 자동차 등 특정 산업에 투입되는 용도로 수출되는 물량은 PROSEC 이라는 면세 프로그램을 적용받고 있으며, 한국의 대멕시코 철강 수출의 상당 부분이 자동차용 철강판으로 타격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
-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등의 자국산업보호를 내세우고 있는 인도는 관세 인상과 수입제한 조치를 빈번하게 내세우고 있음
- 2023년 4월 1일부터 수입산 자동차에 적용되는 관세를 기존 60%에서 70%로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2/3)
- 자국 내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을 유치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며, 실제로 국내 브랜드도 최근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인도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를 추진
- 한편, 테슬라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공장이 완공되기 전까지 최대 5년간 모든 수입 전기차에 대한 세금을 15%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
- 랩탑, 태블릿, PC 등의 품목을 수입시 라이선스를 요구하여 수입제한 조치를 부과할 방침이었으나 주변국들의 반발로 철회
- 특별한 사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그간 ‘메이크 인 인디아’를 내세운 모디 정부 기조의 연장선상으로 파악됨
- 해당 품목을 수입제한품목으로 분류하고 수입 시 라이선스를 요구하겠다고 발표했으나(8/3) 주변국들의 반발로 11/1일 시행하는 것으로 연기하였고, 이후 10/19일 동 조치를 철회하기로 결정¹²⁶⁾
- 모디 총리는 2024년 선거를 앞두고 있어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되

126) Soumyarendra Barik, et al.,(2023.10.20.), “Centre rolls back its plan to licence laptop, PC imports”, The Indian Express.

며, 선거 이전부터 인도의 무역장벽은 다소 높아지는 추세

- WTO 데이터에 따르면 2014-15년 인도의 평균 MFN 관세는 13%에서 2020-21년 14.3%로 인상되었음¹²⁷⁾

127) Mohamed Zeeshan(2023.8.9.), "India's Trade Liberalization Era Seems to Have Ended", The Diplomat.

[표]

1. 러-우 전쟁 이후 주요국 對러 제재 현황 (p.0)
2.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대한 주요국 핵심입장 (p.0)
3.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시나리오별 전망 (p.0)
4. 2024년 세계 주요 선거 일정 (p.0)
5. 2024 미국 대선 관련 일정 (p.0)
6. 바이든 vs. 트럼프 - 주요 이슈 입장 비교 (p.0)
7. 제16대 대만 총통 후보 (p.0)
8. 2023년 미국·EU의 대중국 제재 조치 및 중국 대응 경과 (p.0)
9. 「중국수출 금지·제한 기술목록」 中 희토류 관련 개정 내용 (p.0)
10. 서방의 제재에 맞선 중국의 공급망 강화 정책과 보복조치 (p.0)
11. 글로벌 사우스 주요국별 광물 채굴량 및 매장량 비중 (p.0)
12. 미국의 대중국 제재 주요 입법 추진 동향 (p.0)
13. EU 인공지능법안과 미국의 AI 행정명령 비교 (p.0)
14. EU·中·美의 최근 디지털 정책 비교 (p.0)
15. EU의 빅테크 주요 규제 내용 (p.0)
16. 주요 데이터 규범에 대한 美 경제계 vs. 노동계 입장 (p.0)
17. 미국 반도체·친환경 산업 지원정책 주요 내용 (p.0)
18. EU 반도체·친환경 산업 공급망 강화 정책 주요 내용 (p.0)
19. 온실가스 내재배출량 산정 방법 비교 (p.0)
20. EU-ETS 무상할당량 감축 계획 (p.0)

21. CBAM 적용품목의 대세계 및 대EU 수출금액('23년 1월~10월) (p.O)
22. 미국의 대한국 수입규제 조사 개시 추이(유형별) (p.O)

[그림]

1. 對러시아 제재 부과 국가 (p.00)
2. 우크라이나 전쟁 - 점령 지역 변화 (p.00)
3. 국제유가 추이 ('70~'23) (p.O)
4. 국제유가 상승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p.O)
5. 2020년 美 대선 당시 미국 주별 선거인단 투표 결과 (p.00)
6. 제16대 대만 총통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23.12.16. 기준) (p.00)
7. EU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이슈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p.O)
8. EU 인플레이션율 (p.O)
9. EU 인플레이션율(품목별) (p.O)
10. 최근 2개년 기사다 내각 및 자민당 지지율 변화 (p.O)
11. 미국 대중국 수입 비중 변화 추이 (p.O)
12. 미국 국가별 수입 비중 변화 ('17~'23.9.) (p.O)
13. 대중국 FDI 추이 (p.O)
14. CBAM 입법동향 및 시행시기 (p.O)
15. CBAM 보고서에 제출하여야 하는 정보 (p.O)
16. 발표 예정 위임법률 및 이행법률 목록 (p.O)

[참고]

-
1. 팔레스타인과 하마스, 그리고 가자지구 (p.O)
 2. 석유 관련 국제 협의체 (p.O)
 3.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철강 공급망의 변화 (p.O)
 4. 美 상무부 반덤핑·상계관세 규칙 개정안 핵심 내용 (p.O)

[참고 자료]

[국내 문헌·기사]

고성은, 김경훈(2023.9.) “미국의 IRA 시행지침이 우리나라 배터리 공급망에 미칠 영향”, KITA 통상리포트 제9호, 한국무역협회.

김계현(2023.4.14.), “하이브리드 전쟁에서 핵위기로: 1차 침공과 2차 침공의 비교”,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한반도 포커스 2023-03 우크라이나 전쟁의 현재와 미래」.

김계환, 강지현(2023.10.), “프랑스판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전기차 보조금 제도의 내용과 시사점”, 산업포커스, 산업연구원.

김재경(2017.10.), 미국의 원유 수출규제 완화가 국내 석유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에너지경제연구원.

박가현(2023), “「중국 수출 금지·제한 기술목록 개정안」의 희토류 기술 규제와 시사점”. KITA 트레이드 브리프 제10호, 한국무역협회.

박지완(2023.2.1.), “러우 전쟁 이후 러시아의 대외경제 동향 분석”, KOTRA.

법무법인 세종(2022),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주요국의 대러 제재 비교 및 시사점”, KOSTI 무역안보 Brief.

남경옥(2023.2.15.),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1년과 세계 경제 함의”, 국제금융센터 Issue Analysis.

대한석유협회 기획관리팀 (2005.6.1.), “석유 무기화의 과거, 현재, 미래”, 대한석유협회.

도원빈, 김나을, 김소민(2023),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의 국내경제 영향”. KITA 트레이드 브리프 제16호, 한국무역협회.

도원빈, 허슬비(2023.6.) “국제사회 제재에 대한 러시아 대응 시나리오별 한국경제에 대한 영향”, KITA 트레이드포커스 제11호, 한국무역협회.

박복영, 송원호 (2005.3.6.), “최근 고유가와 1970년대 오일쇼크의 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안남기, 오정석 (2023.10.16.),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시나리오별 영향 점검, 국제금융센터.

이상준(2023.5.22.),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1년 평가와 전망”, 아산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 이소라, 이민주 (2023.10.31.), 이-팔 전쟁으로 인한 유가변동 가능성과 국내산업 영향 및 시사점, 산업연구원.
- 이유진(2023.6.26.),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소고”, 위클리 철강금속, 유진투자증권.
- 이장훈(2023.10.17.), “[글로벌 포커스] 미국, 다시 트럼프의 시대는 올 것인가”, 월간중앙 2023-11호.
- 장우애(2023.2.15.), “러-우 전쟁 1년 영향 및 전망과 시사점”, IBK 기업은행 경제연구소.
- 정해영(2023),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참여국의 디지털 통상규범 분석 및 시사점”, KITA 통상리포트 제5호, 한국무역협회.
- 조상현, 중동의 지역적 개념과 중동전쟁의 역사적 기원, 군사연구 제125집.
- 최용호(2023.11.1.), “미국 반도체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가드레일 최종규정의 내용 및 함의”, 경제안보 Review, 23-19호.
- 최은미(2022.11.3.), “기시다 총리 취임 1년, 흔들리는 리더십: 향후 일본정치와 한일 관계”, 아산정책연구원.
- 최지웅(2019), “석유는 어떻게 세계를 지배하는가”, 부키.
- 한송옥(2023.8.4.), “인도, 2023년 11월 1일부 컴퓨터 제품 수입 등록제도 시행”, KOTRA.
- 강병철(2023.11.3.), “[美대선 1년앞] 바이든·트럼프, 재대결 유력...여러 변수에 안갯속 판세”,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31102181400071>
- 권유정(2023.12.26.), “홍해發 물류대란에 해상 운임비 급등”,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industry/company/2023/12/26/YEQQ7B3ZM5CXFFAQ2IHVB7HWBQ/>
- 김계연(2023.11.8.), 2개월째 접어든 전쟁...시가전 공식화에 가자지구 폭풍전야,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31108055100009>
- 김기윤, 문병기(2023.10.31.), “네타냐후 “지금은 전쟁의 시간” 휴전 일축...가자시티 포위“,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31031/121955552/1>
- 김동규(2023.11.08.), "이란 참전시 유가 150달러 간다...대응책 필요",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31108051900003>
- 김승수(2023.9.19.),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가시화에...‘기대’·‘우려’ 팽팽”, 대한경제. https://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309181123594580376

김제관(2023.10.9.), “이번이 5차 중동전쟁? 해묵은 원한 1~4차 전쟁 어땠길래”,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world/10845661>

김진영(2023.10.12.), “세계 철강산업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공급망 전체 악영향’”, 글로벌이코노믹.
https://www.g-enews.com/article/Industry/2023/10/202310121451076656a67d2c7d5a_1

김철문(2023.10.09.), “대만 검찰, ‘홍콩, 대만 ‘가짜뉴스’ 공격의 근거지...배후는 중국’,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31009044700009>.

대니얼 예긴(2022.08.1.), “70년대 오일쇼크보다 센 폭풍 온다...석유 넘어 에너지 위기로”, 조선 이코노미.
https://economychosun.com/site/data/html_dir/2022/08/01/2022080100032.html

문수인(2023.10.26.), “3차 오일쇼크 올라” 이란 참전 여부 최대 변수,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culture/10859227>

박익래. 김동현. 조준형. (2023.11.14.) “바이든-조코위 "이-팔 '2국가 해법' 통한 중동평화 협력하기로".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31114015752071>

박영준(2023.10.30.), “경제 핵심 화두 속 낙태·이민 문제 ‘뇌관’... 치열한 공방 예고”, 세계일보.
<https://www.segye.com/newsView/20231030518026>

박정현. (2023.10.9.)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장기화 시 우려되는 문제들”, 글로벌이코노믹.
https://www.g-enews.com/article/Global-Biz/2023/10/20231009100456152137926aa152_1

박종국(2023.11.3.), “中진출 대만기업인 ‘귀향 투표’ 움직임에 대만 당국 ‘측각’...왜?”,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31103051200097>.

서지원(2023.10.8.), “석유파동 50년만에 중동서 전쟁...석유값 4배 된 그때와 다르다?”,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97813#home>

송승중(2023.11.5.), “새로운 ‘전쟁의 시대’ 열리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숨은 변수들”. 주간조선.
<https://weekly.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29932>

신은별 (2023.11.12.), “형제보단 국익"...'입으로만' 이스라엘 압박한 이슬람·아랍 지도자들, 한국일보.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3111217040001926>

신정은(2023.10.8.), “중동서 '석유 파동' 50년 후 일어난 전쟁...유가 요동치나”,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0083795i>

이우림(2023.12.26.), “컨테이너 운임 50% 오른다”...한국, 홍해 물류위기 현실화,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17440>

이지현(2023.11.17.), “원유 수요감소 기대에 국제유가 5% 가까이 급락”.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31117007000072>

정재용(2023.6.27.), “성희룡 파문’ 대만 민진당, 3천800만원 벌금”,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30627042700009>.

정진호(2023.10.12.), “석유로 압박’ 오일쇼크 뒤엔 중동 전쟁·韓경제 또 휘청이나”,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98774#home>

조은아, 송혜미(2023.12.25.), “홍해發 물류대란 위기에 ‘인플레이 공포’”,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31225/122762781/1>

주영재(2017.06.9.), “50주년 맞은 ‘6일 전쟁’...이스라엘은 땅과 함께 물도 지배한다”, 경향신문.
<https://m.khan.co.kr/world/world-general/article/201706090001001#c2b>

최준영(2023.10.23.),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세 가지 시나리오”, 조선이코노미.
https://economychosun.com/site/data/html_dir/2023/10/22/2023102200023.html

하만주(2023.9.30.), “1년 앞으로 다가온 2024년 美 대선... 미리보는 관전 포인트 3가지는”,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30929/121431941/1>

홍수진(2023.11.16.), “미중, 군사대화 재개-펜타닐 단속합의...타이완 수출통제는 이견”, KBS.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19146>

BBC NEWS 코리아(2023.10.11.), “하마스는 누구고,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에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BBC NEWS 코리아.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3g34j212vwo>

[해외문헌 · 기사]

Aiyar, S, A Presbitero and M Ruta (eds) (2023), "Goeconomic Fragmentation: The Economic Risks from a Fractured World Economy", CEPR Press, Paris & London.

Halina Yermolenko(2023.7.27.) "A new round of EU sanctions may affect Turkish steelmakers", GMK Center.

IEA(2022.7.), "Global Supply Chains of EV Batteries", IEA.

IEA (2023), "Oil Market Report – November 2023", IEA.

IEA(2022), "The Role of Critical Minerals in Clean Energy Transitions", IEA

Mazzocco, Sebastian(2023), "Electric shock: Interpreting China's Electric Vehicle Export Boom", CSIS.

Nicholas R. Lardy(2023.11.17.), "Foreign direct investment is exiting China, new data show", PIIE.

Robin Wright (2023.10.31.), "The Five Global Dangers from the Gaza War", Wilson Center.

UNCTAD(2023), "World Investment Report 2023".

World Bank(2023) "Potential Near-Term Implications of the Conflict in the Middle East for Commodity Markets: A Preliminary Assessment". Commodity Markets Outlook.

Abeer Abu Omar(2023.10.25.) "IMF Warns on Prolonged Middle East War, Higher Rates for Longer", Bloomberg.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3-10-25/imf-warns-on-prolonged-middle-east-war-higher-rates-for-longer>

Agatha Kratz, Camille Boullenois(2023.9.13.). "Irrational Expectations: Long-Term Challenges of Diversification Away from China," Rhodium Group.

<https://rhg.com/research/irrational-expectations-long-term-challenges-of-diversification-away-from-china>.

Alberto Nardelli and Jennifer Jacobs(2023.10.21.), "EU Says Lack of US Clarity on Tariffs Sank Trade Announcement", Bloomberg.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3-10-20/eu-says-lack-of-us-clarity-on-tariffs-sank-trade-announcement>

Alejandro N Gomez-Strozzi, *et al.*, “Mexico increases import tariffs for non-Free Trade Agreement countries”, FOLEY.
<https://www.foley.com/insights/publications/2023/08/mexico-increases-import-tariffs-non-free-trade/>

Alyssa Lukpat and Jennifer Calfas(2023.10.30.), “Your Guide to the Presidential Election in 2024”, Wall Street Journal.
<https://www.wsj.com/politics/presidential-election-2024-candidates-dates-guide-a264d4fe>

Ana Swanson(2023.8.8.), “Biden to Restrict Investments in China, Citing National Security Threats”, The NewYork Times.
<https://www.nytimes.com/2023/08/08/business/economy/biden-china-companies-restrictions.html>

Ana Swanson(2022.12.7.), “U.S. Proposes Green Steel Club That Would Levy Tariffs on Outliers”, The NewYork Times.
<https://www.nytimes.com/2022/12/07/business/economy/steel-tariffs-climate-change.html>

Andy Bounds(2023.10.10), “EU plans anti-subsidy probe into Chinese steelmakers”, Financial Times.
<https://www.ft.com/content/3fb3c754-11db-461d-b117-33d9926b14e0>

Anthony Zurcher(2023.11.3.), “What a Donald Trump second term would look like”, BBC.
<https://www.bbc.com/news/world-us-canada-67272569>

Ari Hawkins(2023.12.18.), “EU to give Biden lifeline with tariff truce”, Politico.
<https://www.politico.com/newsletters/weekly-trade/2023/12/18/eu-to-give-biden-lifeline-with-tariff-truce-00132214>

Ari Hawkins(2023.12.4.), “Raimondo chides Congress on China tech threat”, Politico.
<https://www.politico.com/newsletters/weekly-trade/2023/12/04/raimondo-chides-congress-on-china-tech-threat-00129841>

Britannica(2023.12.27.), “Organization of Arab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
<https://www.britannica.com/topic/Organization-of-Arab-Petroleum-Exporting-Countries>

Camille Gijis and Sarah Anne Aarup(2023.10.11.), “It’s EU and US against the rest of the world in new steel club”, Politico pro.
<https://www.politico.eu/article/steel-aluminum-tariffs-european-union-united-states-china-imports-trade/>

Carolina Gonzalez(2023.9.7.), “Mexico’s AMLO Supports Sheinbaum as Morena Presidential

- Pick”. Bloomberg.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3-09-07/mexico-s-amlo-supports-sheinbaum-as-morena-presidential-pick>
- Daniel Cannistra, *et al.*,(2023), “Comment Window Closes for Proposed Commerce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Rules: Foreign Governments, Trade Associations, and Companies Weigh in on Contentious Changes”, Crowell.
<https://www.cmtradelaw.com/2023/07/comment-window-closes-for-proposed-commerce-antidumping-and-countervailing-duty-rules-foreign-governments-trade-associations-and-companies-weigh-in-on-contentious-changes/>
- Doug Palmer(2023.11.7.), “Report shows US trade deficit with China falling sharply in 2023”, Politico.
<https://subscriber.politicopro.com/article/2023/11/report-shows-u-s-trade-deficit-with-china-falling-sharply-in-2023-00125750>
- Eliza Galeana(2023.1.23.), “Central Market’s Solar Plant Will Be Completed in 2023”, Mexico Business News.
<https://mexicobusiness.news/energy/news/central-markets-solar-plant-will-be-completed-2023>
- Eurometal(2023.10.23.), “US, EU extend negotiations on global steel, aluminum pact as no deal reached at summit”, Eurometal.
<https://eurometal.net/us-eu-extend-negotiations-on-global-steel-aluminum-pact-as-no-deal-reached-at-summit/>
- European Union Chamber of Commerce in China(2023.6.21.), “Business Confidence Survey 2023”.
- Fauchoux V (2023.11.9.), “Artificial Intelligence: Joe Biden’s executive order vs. the European AI Act – Common Goals?”, Deprez Guignot Associés (DDG).
<https://www.ddg.fr/actualite/ai-joe-bidens-executive-order-vs-the-european-ai-act-common-goals>.
- Ryan McMorrow, *et al.*,(2023.7.16.), “Multinationals in China accelerate push to decouple data”, Financial Times.
<https://www.ft.com/content/2f52965f-3bdb-4223-891b-e2208ad2e16e>.
- Thomas Hale *et al.*,(2023.10.29.), “China suffers plunging foreign direct investment amid geopolitical tensions”, Financial Times.
<https://www.ft.com/content/56294843-7eff-4b83-9fa2-c46fb4ac1278>

Joe Leahy(2023.11.12.), “Beijing’s data and spy laws threaten to spur decoupling with Europe, says business group”, Financial Times.

<https://www.ft.com/content/93bbc4ee-41ee-4552-9da0-d2cfaae0528>

John Reed and Peter Campbell(2023.11.13.), “India considers slashing EV tariffs to lure Tesla”, Financial Times.

<https://www.ft.com/content/cb0ab12b-e4ee-4bcc-8c33-f156af5772b0>

Guy Faulconbridge(2023.11.7.), “Exclusive: Russia's Putin to stay in power past 2024, sources say”, Reuters.

<https://www.reuters.com/world/europe/russias-putin-stay-power-past-2024-sources-say-2023-11-06/>

Hans Von Der Burchard and Nicholas Vinocur(2023.9.14.), “Von der Leyen won’t stand as MEP candidate in shot at second term”, Politico.

<https://www.politico.eu/article/eu-commission-von-der-leyen-wont-run-mep-second-term-germany-ep/>

Inside U.S. Trade(2023.6.23.), “Argentina argues its TIFA with the U.S. justifies access to IRA benefits”, Inside U.S. Trade.

<https://insidetrade.com/daily-news/argentina-argues-its-tifa-us-justifies-access-ira-benefits>

Inside US Trade (2023.10.6.), “IPEF members finalizing parts of trade pillar; some digital pieces on hold”, Inside U.S. Trade.

<https://insidetrade.com/daily-news/ipef-members-finalizing-parts-trade-pillar-some-digital-pieces-hold>

Inside US Trade (2023.10.24.), “U.S. to end support for WTO e-commerce proposals, wants ‘policy space’ for digital trade rethink”, Inside U.S. Trade.

<https://insidetrade.com/daily-news/us-end-support-wto-e-commerce-proposals-wants-policy-space-digital-trade-rethink>

Inside US trade(2023.11.14.), “Auto industry fears China could use graphite controls to reverse EV ‘friendshoring’”, Inside U.S. Trade.

<https://insidetrade.com/daily-news/auto-industry-fears-china-could-use-graphite-controls-reverse-ev-friendshoring>

Inside US trade(2023.11.22.), “Analysts: New export controls leave room for Chinese circumvention”, Inside U.S. Trade.

<https://insidetrade.com/daily-news/analysts-new-export-controls-leave-room-chinese-circumvention>

James Oliphant and Trevor Hunnicutt(2023.10.13.), “US presidential election 2024: What you need to know”, Reuters.

<https://www.reuters.com/world/us/us-presidential-election-2024-dates-candidates-latest-issues-2023-09-22>

John Polga-Hecimovich(2022.11.22.), “China’s evolving economic footprint in Latin America”, GIS.

<https://www.gisreportsonline.com/r/chinas-economic-power-grows-in-latin-america/>

Karl Tsuji(2022), “US–EU Joint Statement Modifies U.S. Section 232 Steel and Aluminum Tariffs, Lifts EU Retaliatory Tariffs, and Announces Negotiations of a First-ever Carbon-based Sectoral Arrangement”, Executive Briefings on Trade,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https://www.usitc.gov/publications/332/executive_briefings/ebot_us-eu_modify_steel_aluminum_retaliatory_tariffs.pdf

Laura Dubois, *et al.*,(2023.9.13.), “Ursula von der Leyen lays out pro-business pitch ahead of EU elections”, Financial Times.

<https://www.ft.com/content/8828eabf-c6cf-49aa-be3c-0e286df528a8>

Yimou Lee((2023.06.21.), “Exclusive: Taiwan on alert for Chinese-funded election interference”. Reuters.

<https://www.reuters.com/world/asia-pacific/taiwan-alert-chinese-funded-election-interference-2023-06-21/>

Leo von Breithen Thurn(2023.12.11.), “European Elections: A Game-changer in 2024?”, Geopolitical Monitor.

<https://www.geopoliticalmonitor.com/european-elections-a-game-changer-in-2024/>

Martin Wolf(2023.11.1.). “The economic consequences of the Israel– Hamas war”, Financial Times.

<https://www.ft.com/content/effaa755-3379-42f5-8d54-91ca66c1a0a7>

Nick Meeker(2023.9.11.), “Taiwan’s Democracy in Action Ahead of the 2024 Elections”, Asia Program. Wilson Center.

<https://www.wilsoncenter.org/blog-post/taiwans-democracy-action-ahead-2024-elections>.

Mia Gindis and Julia Fanzeres(2023.10.30.), “Oil Could Jump Above \$100 on Small Disruption, World Bank Warns”, Bloomberg.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3-10-30/small-disruption-could-drive-oil-to-102-world-bank-warns>

Mohamed Zeeshan(2023.8.9.), “India’s Trade Liberalization Era Seems to Have Ended”, The Diplomat.

<https://thediplomat.com/2023/08/indias-trade-liberalization-era-seems-to-have-ended/>

Ko Fujioka(2023.2.7.), “Japan to subsidize domestic chipmaking beyond the cutting edge”, Nikkei Asia.

<https://asia.nikkei.com/Business/Tech/Semiconductors/Japan-to-subsidize-domestic-chipmaking-beyond-the-cutting-edge>

James Bikales(2023.12.1.), “Biden’s latest China crackdown puts his EV ambitions at risk”, Politico.

<https://www.politico.com/news/2023/12/01/biden-china-crackdown-ev-00129475>

Rahul Chauhan, *et al.*,(2023.5.29.), “Has India really become a mobile phone manufacturing giant?”, The Wire.

<https://thewire.in/trade/india-mobile-phone-manufacturing-giant-assembly>

Randall Hansen (2023.9.29.), “Date with history: How the oil crisis changed the world”, Chatham House.

<https://www.chathamhouse.org/publications/the-world-today/2023-10/date-history-how-oil-crisis-changed-world>

Robin Emmott, *et al.*(2013.7.27.), “EU, China resolve solar dispute – their biggest trade row by far”, Reuters.

<https://www.reuters.com/article/idUSBRE96Q03Z/>

Samantha Gross(2019.3.5.), “What Iran’s 1979 revolution meant for US and global oil markets”, Brookings.

<https://www.brookings.edu/articles/what-irans-1979-revolution-meant-for-us-and-global-oil-markets/>

Sarah Anne Aarup and Camille Gijss(2023.10.17.), “EU-US metals talks go down to the wire ahead of Friday summit”, Politico pro.

<https://www.politico.eu/article/eu-fumes-at-latest-us-proposal-for-green-steel-club/>

Sarah Fortinsky(2023.10.19.), “Swing-state voters trust Trump more on economy: survey”, The Hill.

<https://thehill.com/homenews/campaign/4264352-swing-state-voters-trust-trump-more-on-economy/>

SolarPowerEurope(2023.9.11.), “Record-low solar PV prices risk EU's open strategic autonomy”,

SolarPowerEurope.
<https://www.solarpowereurope.org/press-releases/record-low-solar-pv-prices-risk-eu-s-open-strategic-autonomy>

Soumyarendra Barik, *et al.*(2023.10.20.), “Centre rolls back its plan to licence laptop, PC imports”, The Indian Express.
<https://indianexpress.com/article/business/economy/govt-tweaks-licensing-norms-laptop-computer-imports-place-online-authorisation-system-8990566/>

Stefanno Sulaiman(2023.4.10.), “Indonesia to propose limited free trade deal with US on critical minerals”, Reuters.
<https://www.reuters.com/world/asia-pacific/indonesia-propose-limited-free-trade-deal-with-us-critical-minerals-2023-04-10/>

Steven Overly(2023.6.2.), “More countries line up for U.S.’S EV tax credits”, Politico.
<https://www.politico.com/news/2023/06/02/southeast-asian-trade-partners-push-for-ev-tax-perks-00099800>

The Economic Times(2023.10.10.), “Israel-Hamas war may impact steel, fertilizer, organic chemicals sectors”, The Economic Times.
<https://economictimes.indiatimes.com/small-biz/sme-sector/israel-hamas-war-may-impact-steel-fertiliser-organic-chemicals-sectors-phdcci/articleshow/104301790.cms>

Tom Malinowski(2023.8.18.), “Here are 3 ways to end the war in Ukraine. One might actually work”, Politico.
<https://www.politico.com/news/magazine/2023/08/18/how-to-end-ukraine-war-00111752>

UN News(2023.10.26.), “UN General Assembly adopts Gaza resolution calling for immediate and sustained ‘humanitarian truce’”, UN.
<https://news.un.org/en/story/2023/10/1142847>

Veronika Melkozerova(2023.11.6.), “Ukraine’s democratic dilemma: When to hold elections”, Politico.
<https://www.politico.eu/article/ukraine-war-democracy-dilemma-elections/>

Victoria Waldersee(2023.9.5.), “Europe’s carmakers fret over China’s EV prowess at Munich car show”, Reuters.
<https://www.reuters.com/business/autos-transportation/munich-car-show-shines-spotlight-china-competition-ev-race-2023-09-04/>

Jason Douglas(2022.12.28.), “China Increases Trade in Asia as U.S. Pushes Toward Decoupling”,

Wall Street Journal.
<https://www.wsj.com/articles/china-increases-trade-in-asia-as-u-s-pushes-toward-decoupling-11672231684>

World Bank Commodity Price Data.
<https://www.worldbank.org/en/research/commodity-markets>

Yuriy Grigorenko(2023.8.18.), “Asian producers have replaced the supply of long products from Russia to the EU”, GMK Center.

Yuriy Grigorenko(2023.10.13.), “How sanctions affect the import of Russian steel products to the EU”, GMK Center.

Ziad Daoud, Galit Altstein, and Bhargavi Sakthivel(2023.10.13.), “Wider War in Middle East Could Tip the World Economy Into Recession”, Bloomberg.

21世纪经济(2023.11.9.), “芯片战场 | 英伟达、英特尔均计划推出改良版AI芯片 英伟达产品或年底量产”.
<https://m.21jingji.com/article/20231109/herald/c172da38f4e53b5c5c5b9e9d78132384.html>

讀賣新聞(2023.10.23.), “衆参2補選 政権への警鐘と受け止めよ”.
<https://www.yomiuri.co.jp/editorial/20231023-OYT1T50013/>

商务部(2023.12.21.), “中国禁止出口限制出口技术目录”.

[법안 및 정부 관련 문서]

Department of Commerce (2023.09.25.), “Preventing Improper Use of CHIPS Act Funding”.

Department of state(2023.8.15.), “Department Press Briefing–August 15, 2023, Vendant Patel, Principal Deputy Spokesperson”.

<https://www.state.gov/briefings/department-press-briefing-august-15-2023/>

Department of Commerce (2023.09.25.), “Preventing Improper Use of CHIPS Act Funding”.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3/09/25/2023-20471/preventing-the-improper-use-of-chips-act-funding>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2023.7.26.), “2023 Updates to The Strategy To Prevent the Importation of Goods Mined, Produced, Or Manufactured With Forced Labor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European Commission(2023.12.19.),“EU prolongs tariff suspension for US products related to the steel and aluminum dispute”,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3_6713

European Commission(2018.6.20.), “EU adopts rebalancing measures in reaction to US steel and aluminum tariffs”, press release”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18_4220

USTR(2021.10.1.), “Steel and Aluminum, US–EU Joint Statement”.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files/Statements/US-EU%20Joint%20Deal%20Statement.pdf>

国家统计局(2023.10.19.), “擎翥善清：固定资产投资规模持续扩大 制造业投资增速继续加快”.

KITA

TRADE REPORT

2023

